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희망을 넘어
행복으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1. 투자 활성화

1.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0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국토부, '14.4)	12
002.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입주 자격 완화 (해수부, '14.7)	13
003.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문체부, '12.10 제출)	14
004.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이내 감면 (산업부, '14.8)	15
005.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환경부, '14.11)	16
0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기간 단축 (국토부, '14.9)	17
007.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산업부, '14.4)	18
008.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산업부, '14.8)	19
009.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기준 완화 (산업부, '14.12)	20
010.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사업 지원 (서청원 의원, '14.6 발의)	21
011.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 (신성범 의원, '14.6 발의)	22
0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 및 공업 지역으로 개발 가능 (국토부, '14.6)	23

2. 산림 입지·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

013.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산림청, '14.9)	24
014. 보전산지에 병원 부대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9)	25
015.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국토부, '14.10)	26
016.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산림청, '14.9)	27
017.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12 예정)	28
018.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8)	29
019.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산림청, '14.9)	30
020.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산림청, '14.9)	31
02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가능 (환경부, '14.10)	32

3. 도로·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022.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국토부, '12.9 제출)	33
--	----

0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동우 의원, '14.3 발의)	34
024.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이노근 의원, '14.10 발의)	35
025.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강석호 의원, '14.10 발의)	36
02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국토부, '14.11)	37
027.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예정)	38

4.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28. 내국세 환급 시간 단축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 해소 (관세청, '14.9)	39
029. APEC 경제인여행카드, 서비스업체에도 발급 (법무부, '13.12)	40

5. 농어업 규제개혁을 통해 잘사는 농어촌 실현

030. 등외등급 홍삼의 가공방법 자율화 (농식품부, '14.11)	41
031. 1~2년생 인삼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농식품부, '14.10)	42
032.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농식품부, '14.8)	43
033. 어촌관광구역 내 민간의 토지 매입 기회 확대 (해수부, '14.3)	44

6.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로 기업활동 지원

034.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산림청, '14.4)	45
035.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식약처, '14.9)	46
036.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환경부, '14.1)	47
037.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제 도입으로 법인 설립 활성화 (법무부, '14.10 제출)	48
038.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립 인가 요건 완화 (교육부, '14.2)	49
039. 기존 입주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환경부, '14.4)	50
040. 산업단지 내 식당,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복합구역제도 도입 (산업부, '14.12)	51
041.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경찰청, '14.4)	52
042.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국토부, '14.4)	53
04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최동익 의원, '14.9 발의)	54

7. 행정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044.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확대 (산업부, '14.8)	55
045. 디자인, 한 번의 출원으로 70여개국에서 동시 보호 (특허청, '14.7)	56
046.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관세 환급 (관세청, '14.4)	57
047. 원산지포괄증명기간 합리화로 FTA 특혜관세 적용 활성화 (관세청, '14.8)	58
048. 모든 사업장이 고용 ·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용부, '14.9)	59
049. 상수원 상류 떡, 한과, 커피 공장 허용 (환경부, '14.12)	60
050.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 (환경부, '14.9)	61

2. 신산업 창출

8. 미래대비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051.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자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국토부, '14.10)	63
052.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식약처, '14.8)	64
053. 의사 · 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가능 (복지부, '14.4 제출)	65
054.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술 발전 촉진 (복지부, '14.7)	66
055. IT 융합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식약처, '14.10)	67

9. 신규시장 진입규제 완화

05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국토부, '14.6)	68
057. IT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문정림 의원, '14.8 발의)	69
058.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안전처, '14.6)	70
05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 · 숙박업 등 추가 (복지부, '14.9)	71
060.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국내 보험사도 참여 가능 (복지부, '13.5 제출)	72
061. 수출용 차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 (식약처, '14.7)	73
062.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 · 인증 가능 (김현숙 의원, '14.5 발의)	74

10. 환경과 공존하는 재활용사업 확대

063. 폐기물 재활용방식 기준 완화로 재활용시장 진입기간 단축 (환경부, '14.9 제출)	75
---	----

064.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재활용 (농진청, '14.7)	76
065. 굴 껍질,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 (환경부, '14.7)	77
066. 폐기하던 계란껍질, 비료 원료로 재활용 (환경부, '13.12)	78

11. 지식재산 강국 실현

067.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 확대 (특허청, '14.12)	79
068. 한글 · 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특허청, '15.1 시행)	80

12. 절차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

069.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관세청, '14.8)	81
070. 제3국 간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관세청, '14.5)	82
071. 모바일 의료용 앱 관리 기준 정비 (민현주 의원, '14.6 발의)	83

3.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13. 벤처 ·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072.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중기청, '14.6)	85
073.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문체부, '14.7)	86
074.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부, '14.9)	87
075.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15.3 시행)	88
076.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로 경영연속성 보장 (병무청, '14.2)	89
077.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 가능 (중기청, '14.12)	90

14.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078.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금융위, '14.2)	91
079. 우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금융위, '14.2)	92
08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제도 개선 (중기청, '14.7)	93
081. 중소기업에도 세금포인트 부여 (국세청, '14.2)	94

15.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082. 정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대가 지급 (미래부, '14.5)	95
083.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 (공정위, '14.2)	96

16. 재창업 등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제공

084.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실패중소기업의 재기 기회 확대 (법무부, '14.6 제출)	97
085. 일시적 휴·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중기청, '14.5)	98
086.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14.5)	99

17. 행정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

087. 중소기업,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특허청, '14.3)	100
088.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고용부, '14.4)	101
089.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14.6)	102
090. FTA 수출컨설팅, 업체부담금 완화 및 지원 확대 (중기청, '14.2)	103
09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중기청, '14.7)	104
092.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갱신기간 확대 (중기청, '14.7)	105
09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대체수강 가능 (고용부, '14.11)	106
094.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 일원화 (고용부·국세청, '14.9)	107
095.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 '14.12)	108

18.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096.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정보를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고용부, '14.9)	109
097.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20% 추가 고용 가능 (고용부, '14.1)	110
098.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고용부·법무부, '14.10)	111

4.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9.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과도한 영업규제 완화

099.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식약처, '14.10)	113
---	-----

100.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약처, '14.10)	114
101. 택배차량 증차로 합법적 영업 가능 (국토부, '14.8)	115
102. 도시재생지역의 외국인관광민박, 내국인 관광객 숙박 가능 (문체부, '14.11)	116
103.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판매 가능 (식약처, '14.5)	117
104. 미용사에서 메이크업을 분리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고용부, '15.7 시행)	118

20. 자영업자 단속 및 준수사항 합리화

105.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여가부, '14.10)	119
106.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감소·변경 간편화 (안전처, '14.9 제출)	120
107. 창문, 입간판, 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행자부, '14.9)	121
108.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및 주정차 단속 완화 (경찰청, '14.1)	122
109.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국방부, '14.1)	123

21. 금융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110.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 '14.12 예정)	124
---	-----

5. 국민 불편 개선

22. 부당한 수수료 등 국민부담 경감

111.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금융위, '14.4)	126
11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고용부, '14.6)	127
113.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 (국세청, '14.1)	128
114.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법무부, '14.4)	129
115.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관세청, '14.7)	130
11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경찰청, '14.12 예정)	131
117. 특기 의경 온라인 지원 가능 (경찰청, '14.4)	132
118.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국세청, '14.2)	133

23.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119.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부, '14.5)	134
120.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국토부·산업부·환경부, '14.11)	135
121.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 일원화 (경찰청, '14.12 예정)	136
122. 범죄경력회보서 영문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경찰청, '15.1 시행)	137
123. 대입전형 예고기간 확대 및 발표된 시행계획 변경 제한 (교육부, '14.4)	138

24.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반 구축

12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금융위, '14.8)	139
125.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기재부, '14.9)	140
126. 온라인쇼핑몰, 주민등록번호 확인 없이 이용 가능 (미래부, '15년 예정)	141
127. 외국인의 한류 콘텐츠 구매를 가로막던 본인·연령 확인 해소 (미래부, '14.12 예정)	142
128.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원클릭 간편결제' 가능 (미래부, '14.12 예정)	143
129. 온라인 정보수집 동의 절차 간소화 (미래부, '14.12 예정)	144
130.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 개선 (교육부, '14.3)	145
131.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식약처, '14.11)	146
132.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통사 번호이동 가능 (미래부, '14.7 시행)	147

25. 불필요한 권리제한 철폐

13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국토부, '14.10)	148
134.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 폐지 (산업부, '14.6)	149
135. 청소년 인터넷게임 섯다운제에 '부모섯택제' 도입 (여가부, '14.11 제출)	150
136.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숫자로 대체 (경찰청, '14.7)	151
137. 청원경찰 임용연령 폐지로 50세 이상 취업기회 확대 (경찰청, '14.3)	152

26. 국민에게 기회제공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138.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농식품부, '14.4)	153
139.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전원마을 활성화 (농식품부, '14.9)	154
140. 해외 직접구매 시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 허용 (관세청, '14.6)	155

141.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교육부, '14.1)	156
142.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초·중등학생 어학캠프 가능 (교육부, '14.5)	157
143.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 납부 가능 (기재부, '14.2 제출)	158
144. 산업체 근무경력,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 '14.12)	159

6. 안전한 사회 구축

27.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145. 연안 여객선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해수부, '14.9)	161
14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환경부, '15.1 시행)	162
14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려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 (원안위, '14.12)	163

28. 시민·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구축

148.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미래부, '14.2)	164
14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국토부, '14.1)	165
15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고용부, '14.9)	166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정부는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귀를 더 크게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민생 중심·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열고,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민경제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도 뽑았습니다.
국민 불편은 줄였고 사회 안전은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 성과 중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 150선을 모았습니다.
기회와 활력은 더하고, 비용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 행복은 배로 높이며, 성과와 변화는 나누는
규제개선 사례를 만나보세요.

경제는 살고! 일자리는 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규제개혁이 만들어 갑니다.

투자 활성화

“기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기업 활동을 위해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0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공장 증설이 쉬워져 일자리가 8,000개나 늘어나요!

S전자는 화성시에 동탄 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진 땅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구역 안에서만 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두 구역에 걸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역을 넘어서는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기존의 건축물과 용도가 같다면 구역을 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화성시 S전자 시설 투자 시 7조원 규모,
8,000여명 일자리 창출 예상



개선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이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까지
걸쳐 있어야선 안 됨

개선 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의 소유권이 같고,
건축 용도가 같으면 구역을 넘어서는 동일 건축물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국토부, '14.4월)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002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입주 자격 완화

낮은 임대료에 물류 혜택까지, 제조업 날개를 달다!

"임대료도 낮고, 항구까지 가는데 드는 운송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욱이 원자재와 제품을 출하하는 시간까지 빨라지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데요……."

— 풍력타워 제조업체 C사

편리한 물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화물 물류 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제조업체들의 설움이 풀리게 됐습니다.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공장도 물류기업과 차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기준은 물류기업이 유리했습니다.
이를 합리화해서 제조업도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광양시 C사 시설 투자 시 260억원 규모,
260여명 일자리 창출 예상



개선 전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 기준이
물류업을 우대하고 있어 제조기업 입주 실적이 미흡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의 기업으로 제조업 입주
자격 제한

개선 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0이어도 제조업 입주 가능
'1종 항만배후관리 관리지침' 개정 (해수부, '14.7월)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003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학교 주변 관광호텔 규제, 가시 빼고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외국인이 자주 왕래하는 대도시 부도심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지에 유해시설 없이 일반 모텔과는 차별화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호텔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텔 자체를 유해업소로 지정한 관련 규제(학교보건법)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유흥장이나 카지노와 같이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 경계 50m~200m)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호텔 개발에 따른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23개 호텔 4,300여실 증가로 7,000억원 투자 및 1만7,000여명 일자리 창출 예상



개선 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 200m)내 호텔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개선 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 50m~200m)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

• ① 유해시설 없음 것 ② 객실 100실 이상 ③ 유해시설 설치 적발시 등록취소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문체부, '12.10월 제출)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004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공장 넓히는데 부담이 확~ 줄었어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넓힐 땅이 없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자리한 한기업 대표의 고충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G기업 등 6개 석유화학 회사는 공장 인근에 있는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공장을 넓히려 했었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녹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서 오른 땅값 상승분의 50%와 없어지는 녹지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비용을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이 내야 할 땅값 상승분 50% 내에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장 증축과 같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기업 부담 완화와 설비 투자 유도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572억원 부담 완화.
기업 설비투자 2조6,600억원 유도 예상



개선 전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

개선 후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부, '14.8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4)

005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쏜다!

“왜 국산 먹는샘물은 맹물만 있고, 탄산수는 없는 거죠?
마트에 가면 외국산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비쌌는데!”
평소 프랑스산 P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 L씨는 의아했습니다.
탄산수의 인기만큼이나 시장도 커지는데 국산 제품을 찾기가
어려우니 말입니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을 만드는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제가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탄산수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품 선택의 폭도 넓게 되었습니다.



• 탄산수 생산의지가 있는 먹는샘물
기업(21개)의 연계투자 기회 제공으로
420억원의 신규 투자 유도



개선 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 생산이 불가능

개선 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 시설을 허용해 탄산수 생산이 가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1월)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044-201-7188)

0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기간 단축

빠르고 간소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합리화

지방에 전자부품 공장을 짓기 위해서 1만4천㎡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A씨는 매달 쌓여가는 수백만원의 이자 비용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와 같은 고충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빨라지고 절차는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의적 심의는 막으면서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배포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때에는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회의록도 요청 시에 공개하도록 해서 신청인이
부결사유를 정확히 알고 이를 보완해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기간 단축·비용 감소에 기여
공장, 창고 등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투자활성화에 기여



개선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음

개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자의적 심의를 방지하고
비용·기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간소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부, '14.9월)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007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규제 완화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 살아납니다!

"기업이 빌딩에 식당이나 은행을 입점시켜 부수적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건 흔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보조금 지원 규제 때문에 공장 이전에 차질이 생기니 기가 막힙니다." T기업 직원의 말입니다. T기업은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지방의 부지로 공장을 옮기려 했습니다. 부족한 설비투자자금의 일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동안 T사처럼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겸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기업이 투자하는 지방 외의 곳에서 이런 제한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지방투자를 막던 걸림돌이 치워진 것입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연간 1,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1,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개선 전

제한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후

지방투자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산업부, '14.4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008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은 줄고! 외국인 투자는 늘고!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 A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인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자본금 162억원인 A기업은 3000㎡ 용지에 1500㎡ 규모 공장을 갖췄지만 임대료 혜택을 받는 외국인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1,000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 A기업의 이 같은 부담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싸게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임대료 1억1,000만원을 내던 A기업은 2,00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개선 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5년내 부지가액의 200% 외국인 투자유치 의무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통상임대료의 5배 부담

개선 후

외국인투자유치 의무를 부지가액의 100% 범위로 완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산업부, '14.8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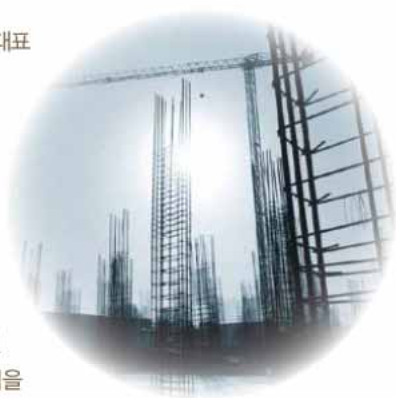
009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기준 완화

경제자유구역 개발, 진입장벽 낮아집니다!

“이거, 중소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요건 아닌가요?” 중소기업 대표 L씨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사 자격요건을 보고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기업신용등급·매출총액·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작은 기업으로선 도저히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사는 출자비율을 100%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자격조건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70%로 완화해 사업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일부 경제자유구역들은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14개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의 투자로 개발 활성화 기대



개선 전

개발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국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대기업 등만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

개선 후

출자비율을 70%까지 완화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까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해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산업부, '14.12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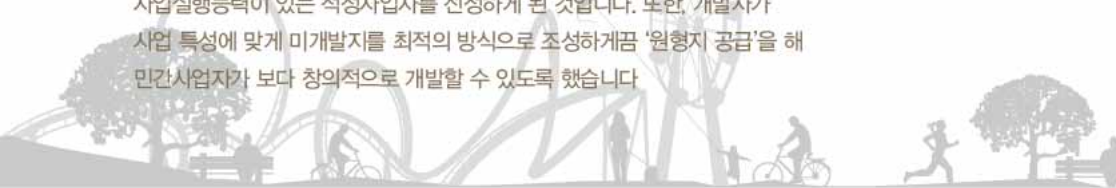
010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사업 지원

여의도 1.4배 땅이 국제테마파크로 살아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민간사업자인USK(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개발(주))과 MOU를 체결하고 화성시 송산면에 4.2km² 규모의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당초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추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테마파크 공급방식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전 단순히 토지 입찰가격만 고려해 용지공급을 하던 가격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사업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실행능력이 있는 적정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미개발지를 최적의 방식으로 조성하게끔 '원형지 공급'을 해 민간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기도 소재 개발부지에 여의도 면적(2.9km²)의 1.4배(4.2km²)에 상당하는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 전

가격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용지 공급

개선 후

사업자 공모 및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용지 공급으로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서청원 의원, '14.6월 발의)

문의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2)

011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

이중규제 풀고, 항만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키우고!

“동일한 땅을 개발하는데 두 개의 법에 묶여있으니 계획 한 번 변경하기 참 어렵군요.”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개발사업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연장해야 했습니다. 개발 부지가 항만배후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까닭에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추가로 변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항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한 번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원화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3~6개월 정도 단축



개선 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추가로 변경한 뒤 사업 추진 가능

개선 후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 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홍일표 의원, '14.4월 발의)
‘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신상범 의원, '14.6월 발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41)

0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 및 공업 지역으로 개발 가능

개발제한 풀린 지역에 8만 개 넘는 일자리가 생겨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 동네가 많이 발전할 거라 기대했는데, 상가도 없고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H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자연녹지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인해 H지역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민간 참여비율은 1/2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주택도 35%이상 공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 될 경우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토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재심의 없이 국토부와의 협의만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른 사업의 발주 · 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선 전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종 일반(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 허용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을 1/2미만으로 제한, 임대주택비율 35%이상 공급 의무화
개발계획 주요사항 5% 이상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필수

개선 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개발 가능
민간 출자비율을 3/2미만으로 완화, 임대주택용지 매매각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가능
개발계획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국토부 협의만으로 종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 (국토부, '14.6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 (국토부, '14.6월)

-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향후 4년간 최대 8조 5,000억원의 투자효과 및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013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우리 동네 뒷산이 명품 관광단지가 된다고요?

“도내의 해안과 산악을 잇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A지자체 공무원

산지에 30만㎡ 이상 대규모로 관광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제한 규정을 두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산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명소와 산악권을 연계한 복합적인 관광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보전산지 내 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로 투자 확대 기대



개선 전

산지에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일정 규모(지자체 보전산지 비율) 이상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

개선 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서의 대규모 관광·산업단지 개발을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9월)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014

보전산지에 병원 부대시설 설치 가능

주차장 생기니 환자 편하고! 병원 좋고!

“주차장도 생기고, 장례식장도 만들면 지역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텐데요...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늘 죄송해요.” K병원 의사의 말입니다. 도시 외곽의 보전산지에 개원한 K병원은 친절환 서비스로 유명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환자가 찾아오자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늘리려 했으나 보전산지엔 병원만 들어올 수 있고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로 막혔습니다.

이제 K병원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주차장, 장례식장 등 병원에 딸린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을 이용해 산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울러 병원 운영수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의료분야
투자유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수도권 지역에 분당소 10실 규모의 정례식장 조성 시 투자비용(건축+토지매입비) 200억원, 입지나 교통이 좋은 지역은 연 40억원 운영수익 기대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개선 전

보전산지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병원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병원의 부대시설은 설치 불가
병원등 및 병원 내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설치 가능하나 건물 외부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별도 부대시설 설치하는 제한됨

개선 후

보전산지 내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병원과 연계된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 '14.9월)

015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좁은 공장 넓히니, 답답한 속이 시원하게 풀리네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에 가구공장을 세운 P씨는 준농림지역에 300평의 땅에 75평 넓이의 공장을 짓고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사업이 잘돼 45평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했지만 공장이 있는 땅이 생산관리지역으로 2005년에 변경이 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돼 공장을 증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장을 지을 당시에 120평(건폐율 4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땅을 샀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증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P씨와 같은 사정의 공장들이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지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땅 면적의 40%(건폐율) 범위 내에서 공장 설비나 근로복지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P씨와 같은 공장주들은 시설을 늘려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녹지·관리지역 내 4,000여개 기존 공장 시설 투자 시, 약 7,000억원 투자 유발 효과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016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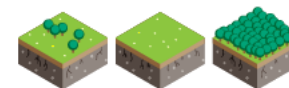
빠진 만큼 땅 더하고... 추가 토지매입 이제 그만!

“원형보전지 면적만큼 땅을 더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큰 걱정입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산지에 공장을 조성하려던 S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룹니다. 1만㎡의 임야를 구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니 2,000㎡의 산지를 원형대로 보전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0㎡ 땅을 보전하고 남은 8,000㎡의 땅으로는, 설립하는 공장면적이 최소 1만㎡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 없단 점입니다. 그러나 S씨에겐 추가로 땅을 매입할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산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사업부지 면적이 1만㎡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원형보전지 면적은 제외돼 초기 창업 업체의 부담이 그동안 컸습니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추가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지에 공장을 조성할 때 원형으로 보전해야 하는 산지까지 사업부지로 인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까닭입니다.



- 공장 설치시 토지매입비 20% 절감 (업체당 1~2억원) 및 투자활성화
5년간 평균 공장용지로 산지전용 면적 2,022만㎡, 원형보전 대상 면적을 5% (101만㎡)로 산정할 경우 연 47억원 토지매입비용 절감 기대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개선 전

산지에 공장 조성 시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는 제외됨

개선 후

공장부지 면적에 원형보전지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 '14.9월)

017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중복규제 폐지하니 지역 관광 살아나네!

강원도는 양양군에 캠핑장, 호텔 등 국민관광 시설을 민자로 유치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려 했으나 중복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따로 산지관리법의 '공익용 산지'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주된 행정조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엔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부수적 행정조치인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엔 불가능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법령마다 따로따로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의 건의를 중앙부처가 받아들이며 중복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인 곳이라도 국토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한 산지에 대해선 국토계획법의 제한만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써 자칫 좌초될 수 있었던 지역투자 사업이 정상추진 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로 지역 투자·

경제 활성화에 기여

양양국제공항주변 민자 유치사업 : 665억원
투자 유치, 500여명 고용효과 예상

개선 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불가

개선 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산림청 '14.12월)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018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로 경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환경 살리는 풍력발전, 한국에선 수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풍력협회 관계자 J씨의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발전은 그동안 입지 규제에 의해 한국에선 크게 발전하지 못해왔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에 설치할 진입로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없어 까다로운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면적을 3만㎡에서 10만㎡ 이하로 완화하고, 진입로 기준도 풍력시설만의 특성을 감안해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해 앞으로 국내 풍력발전 업계의 기술축적과 해외진출이 기대됩니다.



· 태백·의령·양산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사업 재개로 약1,500~2,250억원의 투자효과 예상



개선 전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개선 후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10만㎡ 이하로 완화해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별도의 기준 마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8월)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8)

019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이젠 축산도 관광자원! 축산농장에 활력이 생겼어요!

“요즘 웰빙이다, 생태교육이다, 열풍을 타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시설 규모를 확대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의 하소연입니다.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3만㎡로 제한되어, H씨의 농장은 늘어나는 체험관광수요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H씨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3만㎡에서 5만㎡로 확대한 덕분입니다. 아울러 임업용산지에서의 가축방목 절차도 준보전산지에서와 같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간소화했습니다.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소비자는 더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귀농인들의 희망도 커질 것입니다.



•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산야초 활용에 따른 사료비 절감 연 142억원) 및 축산 농장을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8)

개선 전

준보전산지에선 신고를 통해 가축방목이 가능하며 3만㎡로 가축방목 허용면적 제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선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가축방목이 가능하며 3만㎡로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제한

개선 후

준보전산지에선 신고를 통해 가축방목이 가능하며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5만㎡로 확대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도 신고를 통해 가축방목이 가능하도록 개선,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5만㎡로 확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 '14.9월)

020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벌채 연령은 Down! 국산 목재 활용은 Up!

“나무가 자랄 때까지 계속 투자는 하는데, 중간 소득이 없으니 이 일을 그만둬야하나 싶네요...” 임업인 P씨는 산림경영을 포기할지 고민 중입니다. 나무를 벌채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기준벌기령 탓에 벌채는 못 하고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인 '벌기령'이 49년 만에 완화됐습니다. 1965년 일꾼차례에 걸쳐 강화되지만 한 벌기령은 국산 목재 활용을 위촉시키는 근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녹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껏 국내 산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벌기령을 낮춰서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 벌채 기간 단축으로 연간 1,150억원 소득증대 효과 발생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 및 원활한 원자재 공급 기대



문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4-481-4204)

개선 전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등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70년, 낙엽송 60년, 잣나무 70년, 참나무류 70년, 포플러류 15년 등

개선 후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 등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60년, 낙엽송 5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60년, 포플러류 3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9월)

02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가능

친환경 풍력에너지, 1등급 권역에서도 땡땡~

“환경 살리기 위한 풍력발전인데 환경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네요.” D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D기업은 육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 했지만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란 멸종위기종, 희귀야생 동·식물이 서식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제 D기업은 계획의 차질 없이 풍력단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라도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만 마련된다면 육상풍력개발사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 지침’이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이로써 풍력개발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 시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온실가스 감축

- 추진 중인 7개소 개발 시 3,000명 고용 창출, 5,000억원 투자유발 효과, 연간 30만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소나무 7천만그루 대체효과)
-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육상풍력단지 48개소(약 4조2,000억원 투자 예상)



개선 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보전·복원을 고려해 개발을 제한
1등급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육상풍력개발사업 입지 검토 가능

개선 후

환경보호대책이 전제된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도 육상풍력개발사업의 입지가능성 검토 가능
'육상풍력환경성 평가지침' 제정 (환경부, '14.10월)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

022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우리 회사가 가진 신기술이 많은데 적용도 못하고, 늘 비슷한 품질의 아파트만 내놓으니 답답하죠.” A건설사 직원의 말입니다. A사는 지진과 풍진을 동시에 제어하는 신기술을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하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가격에 따라 설정된 기본적인 수준의 주택공급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B건설사는 상한가격보다 훨씬 낮게 분양가를 계획했지만 분양가 심사 기간에(1~2주) 비용부담이 컸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30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바+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속되며 공급위축, 품질저하,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곤란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 후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 주거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조합원 부담금 7.9% 감소 효과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입주 후 내부마감 등 재시공에 따른 연 6,143억원의 자원낭비 방지 기대



개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 제외

개선 후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 제도를 도입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국토부, '12.9월 제출)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0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담금, 주거 불편, 한꺼번에 날아갔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로 얼굴 붉히기 일쑤예요. 게다가 벽면 곳곳에 금이 가니 불안해서 살 수 있나요?”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K씨는 어서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되길 바라는 맘에 재건축사업 조합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던 얘기에 K씨와 이웃 조합원들은 선뜻 사업 진행을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되며 K씨와 이웃주민들의 부담감이 덜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가격 차이가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서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를 재건축조합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억제하려고 도입한 비상조치성격의 제도로, 최근 재건축시장이 침체되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젠 규제 폐지로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든 덕에 차질 없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과도한 재건축 규제 정상화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에도 기여



개선 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환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선 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국회 계류 중 (신동우 의원, '14.3월 발의)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84)

024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시대에 안 맞는 '유명무실' 규제, 이젠 역사 속으로!

“부동산 과열기에 만든 규제, 왜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그대로인가요?”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한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지며 많은 이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주택투기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가 그 의문의 대상입니다.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진 뒤로 이들 규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2006년 2월 이후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도 전무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여건에 맞게끔 두 개의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개선 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공공택지 중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

개선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예정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이노근 의원, '14.10월 발의)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025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보기에 좋고! 수익도 좋아지고!

“여기 건물들은 왜 이렇게 죄다 이상하게 생겼지?” J시 시민 M씨는 도로변을 걷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편 이 곳, 대지 양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한 K씨는 2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양쪽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아,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전체를 활용할 수 없어서 사업성에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도로에 접한 건축물들이 동일하게 사선으로 깎이는 이상한 경관이 생겨난 까닭은 건물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미관과 경제성을 제한하는 규제 탓에 사후 불법 증축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집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용적률을 개발해 투자가 활성화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용적률 추가개발이 가능해져 연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 발생 추정

- 연간 건축 허가 시 도로 주변권 개발비용을 근거해 산출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6)

02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도로변 규제 풀리니 ‘여의도 18배’ 공간이 살아났어요!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려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중·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여의도 면적의 18배(51.76km²)에 상당하는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개선 전

고속도로변과 도로변에 일정 너비의 접도구역을 지정해 건축을 제한 (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

개선 후

고속도로변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하고 군·도 지역의 접도구역을 폐지해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중·개축이 가능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14.11월)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027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진정한 멀티플렉스란 이런 것!

“여기는 주차장도 넓고 오가기도 편한데 그냥 운동장으로만 쓰기엔 아깝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해도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 Y씨의 바람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널, 물류시설, 도서관, 종합운동장, 유원지 등 기반시설 내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소극장·어린이집·생활체육시설,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터미널이나 운동장과 같이 지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영화나 쇼핑 등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국 5,300km²(서울면적 8.7배)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기대



개선 전

터미널,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의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후

기반시설 내 소극장·어린이집·생활체육시설,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심사 중 (국토부, '14.12월 예정)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028

내국세 환급 시간 단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만만다(慢慢的, 천천히)’ 내국세 환급, ‘콰이디얼(快的儿, 신속)’ 처리 요우커(遊客, 중국여행객)를 붙잡아라!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몸 상태로 한참을 기다리려니 짜증나네요.”

일주일 간의 서울 관광을 마친 중국인 X씨는 한국 백화점에서 산 지갑의 내국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자동환급기 앞에 한참 줄을 서야 했습니다. 환급기에 환급신청을 한 후에도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5분을 기다렸습니다.

내국세 환급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서버 구축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기존 환급처리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에 5분 정도 소요되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용서버가 구축된 후로는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소요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요우커 등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쇼핑관광객의 편의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개선 전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 사용
처리시간이 늦고(약 5분 정도 소요)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해 안정적 운영 곤란

개선 후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구축
처리시간을 40초로 단축,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례 방지
내국세 환급 전용 서버구축 및 합동근무체제 운영 (관세청, '14.9월)

• 내국세 환급(Tax-refund) 연 244만 9,000건 신속 처리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예상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서비스도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미래 유망산업을 키운다면, 정착 ‘APEC 경제인여행카드’는 제조업체에만 발급해주는 건 낡은 규제 아닌가요?” 디지털미디어 수출입 업체에서 일하는 L씨의 불만입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을 자주 떠나는 L씨는 복잡한 사증 신청 및 외국 입국심사 절차가 늘 번거로웠지만, 서비스업체 종사자란 이유로 ‘APEC 경제인여행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L씨의 출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대상을 무형의 상품을 수출입하는 서비스업체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중국·일본 등 19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빠른 출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제도 변경 이후 8,540명('14. 1월~11월)이 APEC 경제인여행카드 신청, 전년 같은 기간 신청자 수(6,786명) 대비 25.8% 증가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3)

개선 전

물품을 수출입하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개선 후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형 상품을 수출입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APEC 경제인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개정 (법무부, '13.12월)

가공 규제 개선했을 뿐인데 매출이 쑥쑥~

“제조한 홍삼 중 30% 이상이 등급이 없는 홍삼인데, 이것들을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등외 등급 홍삼의 습점·압착제조를 금지하는 규제가 불만입니다. 1~3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외등급 홍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면 파손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기회에도 맞지 않아 판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등외등급 홍삼을 수출하려던 B씨도 중국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습점·압착 제조를 하려 했지만 관련 규제로 포기했습니다.



유통시 파손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캔 포장을 하기 위해선 홍삼에 습기를 가하고 사각형모양으로 압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외등급 홍삼으로는 이런 습점·압착 제조를 할 수 없어 홍삼 가공·수출업체의 고충이 컸습니다. 이에 가공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공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홍삼소비·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홍삼 제조방법 규제 완화로 업계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연 160억원 매출액 증가 예상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개선 전

등외등급 홍삼의 습점·압착 제조 금지로 기업의 소득 창출 저해

개선 후

등외등급 홍삼의 습점·압착 제조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홍삼 제조는 가공업체 자율적으로 선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4.11월)

031

1~2년생 인삼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친환경 인증 받은 인삼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에 민감하잖아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없이 재배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1~2년생 인삼은 유기인증 기준인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친환경 유기농인증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요. 3년근 미만의 인삼도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인삼 재배를 하는 J씨의 말입니다.



인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기간(1~2년 이상, 유기농은 2년이상)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부터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1~2년생 인삼을 묘생(어린 인삼)이나 싹용 등으로 유기농 재배할 경우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종일 이전에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영농기록을 할 수 있게끔 친환경인증기준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인증 인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파종하기 전부터 재배 예정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간 관리를 해야 하는 인삼 농가들이 1~2년생 인삼 판매 소득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 인삼 재배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보호



개선 전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인삼, 더덕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해야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 가능

개선 후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 가능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농식품부, '14.10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3)

032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말산업특구가 늘어난다, 6차 산업이 질주한다!

A시는 대규모 승마 수요를 갖고 있지만 말산업특구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 승마장은 많지만 말 농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해 말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온 B시에게도 말산업특구 요건은 큰 장벽이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제주도를 제외하곤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 지자체는 말산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과 생산규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이전엔 말의 생산·사육하는 농가만 시설기준에 적용됐지만 아젠 승마장까지 시설기준 범위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생산·사육되는 말의 수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수까지 생산규모 기준에 포함해 말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포문을 열었습니다.



• '17년까지 말산업특구 5개소 지정을
통해 승마산업 활성화 및 약 3,5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개선 전

말 생산·사육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개선 후

말 생산·사육 농가와 승마시설을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14.8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5)

033

어촌관광구역 내 민간의 토지 매입 기회 확대

어촌 마을에 활력이 생겼어요!

"휴양시설도 갖추고, 공연장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만한 호텔을 짓고 싶었는데, 공공단체가 땅을 먼저 사버리니 우리에게 기회 없네요." E개발사 직원의 불만입니다. E사는 어촌 항구에 관광객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토지매입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촌관광구역 내 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어촌관광구역이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곳입니다. 그동안 이 구역의 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제한 까닭에 E사 같은 민간업체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촌관광구역 내 토지 매각규제 폐지로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어촌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 어촌관광구역으로 설정된 국가어항 10개항 188,700㎡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기대, 국토의 균형적 발전 효과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3)

개선 전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

- * 토지 : 복지 및 문화시설, 레저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휴게시설 등 용도의 부지
- ** 공공단체 :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협회, 전업어업인, 수산업경영인연합단체

개선 후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어촌관광구역의 토지는 공공단체 우선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공공단체가 아닌 기업, 일반국민도 어촌관광구역 내 토지 매입이 가능
'어촌어항법' 개정 (해수부, '14.3월)

034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저비용 합판 사용 허가로 건축·포장업계 비용이 줄었어요!

수출 포장업체나 건축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합판(E2)은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합판 규격·품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저비용합판(E2)을 합판 품질기준에 포함시키고 실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규정을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합판의 앞·뒷면에만 할 수 있었던 규격·품질표시를 옆면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판은 묶음 단위로 포장돼 수입하기 때문에 품질표시를 앞·뒷면에 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옆면 표시를 허가해서 합판업계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건설업계 및 수출 포장업계, 연 5,894억원 부담 경감 예상



문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개선 전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저비용 합판(E2)이 법적으로는 유통 금지
각 장의 앞·뒷면에만 합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어 묶음 포장된 합판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후

저비용 합판(E2)의 실외 사용 허가
합판의 옆면에도 품질표시가 가능해져 업계 비용 절감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 (산림청, '14.4월)

035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공장 없는 제약회사, 글로벌 경쟁력이 자라는 요람이에요.

“국내엔 마땅한 제조업소가 없고, 국외 업소에 위탁할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제약업체 O사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개발했으나 제조를 위한 시설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자 간의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하는 규제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이제 공장 없는 제약회사도 제약기술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약물이 나오도록 하는 주사나 분말을 입으로 흡입하는 약, 세포독성항암제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약품(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선 해외 위탁 제조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국내 의약품의 연구개발이 촉진되고 제약회사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은 줄어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의약품 기술을 초기 시설투자
(200~1,500억원) 부담 없이 상용화 가능



개선 전

국내제조업체 간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

개선 후

특수설비가 필요하거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위탁제조전문기업을 통한 제조를 허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식약처, '14.9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036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병마개 표시 의무 없어지니 매년 40억원 절감!

“굳이 필요도 없는 증명표시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S씨의 불만입니다. 이 업체는 먹는 샘물을 생산할 때 관리법에 따라 병마개 부분에 먹는샘물 '증명표시'를 인쇄하느라 과도한 인쇄비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명표시로 인한 인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증명표시' 부착의무가 폐지된 것입니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인쇄하는 '증명표시'는 판매량을 파악해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지만, 부담금 부과 기준이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바뀌며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덕에 기업 당 매년 지출되던 인쇄비용 6,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약 42억원 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먹는샘물 판매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마개에 '증명표시'를 인쇄

개선 후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무용해진 '증명표시' 부착의무를 폐지, 기업의 인쇄비 부담 해소
'먹는물 관리법' 개정 (환경부, '14.1월)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037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제 도입으로 법인 설립 활성화

연구회, 장학회... 법인 설립 쉬워지니 좋다!

“도대체 왜 설립 허가가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허가해주고 말고는 주무관청의 자유란 대답만 돌아왔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평소 기부를 생활화해온 C씨는 모교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불허가 처분을 받아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C씨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거절될 걱정 없이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기던 법인 설립 허가주의가 폐지되고, 인가요건만 갖추면 설립 승인을 해주는 인가주의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연구회·장학회 등이 활성화되면 학술도 발전하고 기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설립 활성화 및
학술진흥·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효과



개선 전

법인 설립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개선 후

법령에 인가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민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법무부, '14.10월 제출)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038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립 인가 요건 완화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가 들어온다!

A대학은 인근 국가산업단지 안에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캠퍼스 설립을 오래 미뤘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A대학은 교지 확보의 부담 없이 캠퍼스를 조성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일부 소유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개선 전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준 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함

개선 후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일부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됨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 '14.2월)

• 대학이전 부담완화를 통한 산학연
교류·협력 활성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활성화 기대
- ('13) 설립 인가 11개교, 계획 승인 3개교 →
('14.9.기준) 설립 인가 14개교, 계획 승인 5개교



문의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044-203-6615)

039

기존 입주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10년째 하던 공장, 하루 아침에 나가요?

“10년째 운영해온 공장인데 이 지역에서 나가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N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더 이상 이곳에선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N씨의 공장이 특정물질 배출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N씨처럼 공장을 잘 꾸려오다 갑자기 이전을 강요당할 일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지한 공장이라면 특정물질배출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입지규제가 유연해지며 기업의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 기존 입주한 사업장의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개선 전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를 제한

개선 후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입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선 특정물질의 배출을 허용
‘특별대책지역고시’ 및 ‘5개강 유역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고시’ 개정 (환경부, '14.4월)

문의 :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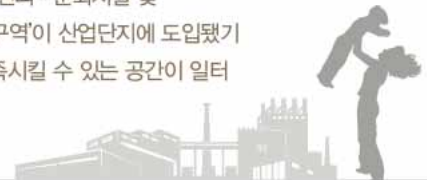
040

산업단지 내 식당,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복합구역제도 도입

직장, 식당, 어린이집이 한 곳에!

“공장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을 텐데요...”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J씨의 바람입니다. J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원시설구역과 산업단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매일 긴 거리를 돌아 출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는 데도 큰 불편이 있습니다. 날마다 차로 20분 가까이 이동해 지원시설구역 내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이 엄격히 분리돼 있고, 양 구역간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단 근로자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산업시설과 편의·문화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구역’이 산업단지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문화·교육·복지·여가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일터 근처에 생겨나면 산업단지의 활력도 커질 것입니다.



• 산업단지 내 공간 혁신 및 업종·
기능간 융합 활성화



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개 구역만 존재해 구역별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

개선 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기존의 4개 구역 외에,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신규로 도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부, '14.12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041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상습 정체 해소! 통행 속도 향상!

“코 앞에 공장이 보이는데 멀리 돌아 유턴할 때마다 답답하죠. 시간은 없고 들러야 할 곳도 많은데...” ○○산업단지에 물건을 납품하는 S씨는 매일 거래 공장 앞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턴 허용구역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돼 거래 공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허용구역이 생겼고, 매일 10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을 이유로 많은 곳에서 일률적으로 좌회전·유턴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장밀집 산업단지엔 보행자가 거의 없고 트럭이 주로 통행하는 등 산업단지만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통량 및 통행속도를 분석해 좌회전·유턴 허용구역을 늘리고, 신호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상습 정체 해소, 통행속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 창출



개선 전

산업단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교통 규제

개선 후

산업단지 주변의 경우 교통량, 도로 여건에 따라 좌회전 및 유턴을 확대하는 등 교통 회전 규제 완화, 신호 연동화
'산업단지 주변 교통회전규제 완화 및 신호연동화' 공문 시달 (경찰청, '14.4월)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0)

042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인다!

“그대로 있자니 비싼 임대료에 숨이 막히고, 저렴한 곳을 찾자니 규제에 막히고... 정말 갈 곳이 없군요.” 택시업체 대표 C씨의 하소연입니다. C씨가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주택지 인근에 위치한 택시차고지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차고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막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C씨의 숨통이 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젠 많은 중소 택시업체가 차고지 임대료 부담 없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택시업계의 차고지 임대료 부담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불가

개선 후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입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4월)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04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전문업체 C사는 최근 어린이의 키 성장을 돕는 기능성 원료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란 점에서 국가가 이를 인정해줄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적극적인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 이외엔 모든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C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기능'과 '심리적·신체적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 이외엔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원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및 관련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일자리 창출효과(예상) : 61,560명
('11년 1.4조 → '17년 5조 : 3.6조 증가,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 '11년 취업유발계수
10억당 17.1명 적용시, '13.한은)



개선 전

기능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발생

개선 후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기능, 성적 호기심·충동·행위 등 심리적·신체적인 의존의 우려가 있는 기능 이외에는 기능성으로 인정하도록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최동익 의원, '14.9월 발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82)

044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확대

제조업과 지식산업, 한 곳에서 함께 발전해요!

"수요업체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안 됩니까?" R사 대표는 답답합니다. 여론조사기업은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해오던 R사는 수요업체들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싶어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했지만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R사의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규제 완화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비롯해 7개 지식산업 업종이 추가로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산업단지에서 새롭게 입주하는 지식산업 업체들은 기존의 제조업체들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단 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업종을 13개 업종으로 제한

개선 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업종을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 (추가업종 7개)
① 환경 평가 및 복원업, ②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③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④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⑤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⑥ 물품감정·계량 및 건물 추출업, ⑦ 무형재산권 임대업제품 제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부, '14.8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045

디자인, 한 번의 출원으로 70여개국에서 동시 보호

디자인 등록, 한 번이면 70여개국에서 OK!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을 모방하지 않게 막으려면 그 국가에서 우리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 이게 참 번거롭네요.” 네일아트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K사 직원의 말입니다. K사는 제품출시 시점에 맞춰 각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이 과도해 이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는 한 번의 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제도로, 현지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국가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 1,600여건, 6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개선 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각각 출원해야 함

개선 후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지정국에서 디자인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는 국제출원제도를 도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특허청, '14.7월)

문의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103)

046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관세 환급

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하드디스크를 생산해 수출하는 S사에선 최근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 제품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량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모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컸습니다. 원재료 손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불량품에 쓰인 원재료가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겹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폐기처분하게 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를 정상 수출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손모량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조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 제조업체의 불량 발생비율이 1%인 경우
연간 200억원의 환급지원 효과 예상



개선 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은 관세 환급 대상. 단,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는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개선 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 모두(불량품 생산 포함)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 환급.
단,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판매가 가능한 원재료는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4월)

문의 : 관세청 세관심사과 (042-481-7873)

047

원산지포괄증명기간 합리화로 FTA 특혜관세 적용 활성화

증명기간 따질 필요 없이 수출에만 신경 씁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부품으로 TV를 만들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한-미FTA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낮춰 수출시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물품이 이미 선적된 이후에 소급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증명서'가 유효한지 세관 검증을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동종동질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할 경우 매번 수출할 때마다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일정기간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무역서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자가 증명일자과 다른 날짜로 소급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들은 이때마다 세관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 관세청과 미국 관세청은 제도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해소해 소급발급한 원산지포괄 증명서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연간 약 243억원 이상의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예상, 기업 경쟁력 강화
- * 한·미 특혜관세 미활용(3,482억원, '13년) × 포괄증명서발행(70%) × 소급발행(10%)



문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048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카드로 냅니다!

"일시적으로 나가야 할 자금들이 몰릴 때면 보험료 내기가 참 힘듭니다. 현금으로 내는 것도 불편하고요." 중소기업 대표 P사장의 하소연입니다. 이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장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었습니다.



- 기업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개선 및 보험료 카드납부 200억원* 예상
- * (추정) 고용·산재보험 납부총액 1조원, 신용카드 납부율 2% 가정시 200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049

상수원 상류 땃, 한과, 커피 공장 허용

강가에 커피, 빵 향기가 솔솔~ 지역경제는 솔솔~

그간 상수원 상류(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지점 7km 이내)에는 어떤 제조 공장도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폐수가 생기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생계형 공장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상류(취수원으로부터 4~7km 이내, 하천 경계로부터 500m 밖) 지역에 커피 가공업이나 빵 제조와 같은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 전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모든 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

개선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 허용

• ① 커피 가공업, ② 땃·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④ 연류 제조업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2월)

문의 : 환경부 정책홍발과 (044-201-7116)

050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

미생물이 꿈틀꿈틀, 농공단지에서 살아나요~

"우리 회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환경유해업종이란 거죠?"
M기업은 공장설립부지를 구매하느라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었지만 유해업종이란 이유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전엔 폐수의 성분이나 배출량과 무관하게,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된 업체는 농공단지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위해성이 적은 미생물(효소) 제조업을 농공단지 입주제한 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자들이 공장설립 부담을 덜게 된 것입니다.



• 미생물제조 업종의 공장 설립 부담을 3배 이상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공단지 토지가격(평당 30~50만원),
비농공단지 토지가격(평당 80~200만원)



개선 전

폐수의 성분이나 배출량 고려 없이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해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

개선 후

환경위해성이 적은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 가능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환경부, '14.9월)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

2

신산업 창출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걸림돌은 치우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탄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51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친환경 수소자동차 타고 땀땀 달리는 미래 경쟁력!

H자동차는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강화로 친환경 수소자동차가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 판도를 결정할 거라 전망합니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H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엔 그동안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친환경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수소자동차 상용화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오며,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으로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불가

개선 후

수소연료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10월)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052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나의 건강, 이젠 스마트폰으로 챙겨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왜 의료기기판매 신고를 해야 하나요?” L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혈압과 혈당을 잴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L씨의 회사는 절차 걱정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또한,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할 때 편리하게 심박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운동과 레저를 위한 심박수계까지 의료기기로 규정했던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 조기 시장 진입 및 스마트폰 수출 증진으로 국익 창출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소매점 약 4만451개소
('12년 기준), 별도 신고 없이 판매



개선 전

스마트폰에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함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수였음

개선 후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 출시 가능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4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8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

053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가능

스마트폰, PC로 집에서 진료 받아요!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을 거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꼭 챙겨 드세요.” 설마를 주민 S씨는 매일 이런 문자 메시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일일 혈압과 신체활동량을 동네의원에게 전송하고, 의료진의 건강관리 지침도 스마트폰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원격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은 덕분에 혈압도 낮추고, 비만도도 개선하게 됐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존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료인들이 정보통신기기로 자문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이나 복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도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하며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도서벽지 주민,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

개선 전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는 금지

개선 후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또는 경증질환에 대한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복지부, '14.4월 제출)



문의 :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044-202-2425)

054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술 발전 촉진

새로운 의료기술, 더 빠르게 국민 곁으로!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기술평가를 받고 급여결정 신청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한꺼번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나요?”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답답합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허가절차와 평가절차 등을 받느라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A씨의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의료기기의 총 심의기간이 단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등재심사’를 순차적으로 거친 제품만 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총 소요기간이 단축되면 국민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빨리 접하게 될 것입니다.



· 신제품과 새로운 치료술의 출시 기간*

단축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활용 시
기존제도 대비 3개월에서 12개월 허가기간 단축
- 시장 조기진입으로 의료기기업체의 수익증대 및
의료산업발전 촉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055

IT 융합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스마트 의료기기, 보다 빠르게 출시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 IT기술을 융합해서 더욱 편리한 건강 생활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변경허가를 받기가 힘든가요?” 벤처기업 대표 J씨의 불만입니다. J씨의 회사는 혈압측정 정보를 바로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모듈을 혈압계에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변경사항을 허가받는데 42일이나 걸려서 시장출시에 차질을 빚었고, 17만원의 수수료도 내야 했습니다.

단순 통신모듈 결합은 의료기기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변경입니다. 이처럼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IT 융합 의료기기를 보다 빠르게 수수료 없이 출시할 수 있게 돼, U-헬스케어 시장의 문이 더 넓게 열린 것입니다.



· IT 융합 의료기기의 시장 출시 기간

단축 효과, U-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개선 전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합치라도 제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의료기기에 통신모듈 결합과 같은 경미한 변경이라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후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10월)

05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자동차 튜닝 산업, 힘차게 달립니다!

“요즘 캠핑카나 푸드트럭에 관심 갖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의 캠핑카들처럼 조명 설치도 할 수 없고, 장사에 필요한 취사시설 설치도 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지.” 튜닝 전문업체 직원 P씨는 꼭 막힌 튜닝산업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제 캠핑카와 푸드트럭의 구조 변경이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전검토만 거치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냉동·연료 시설 설치로 증가된 차량무게의 허용치를 확대해서 생업활동과 여가활동에 딱 맞는 형태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튜닝시장 규모 확대,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튜닝 시장 및 일자리 규모는 '12년 5,000억원 (1만명)에서 '17년 2조7,000억원(2만명), '20년 4조원(4만명)으로 확대 전망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개선 전

엄격한 튜닝규제 탓에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지 못 함

개선 후

금지 대상이던 캠핑카, 푸드트럭의 구조변경 허용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자동차 동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 가능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6월)

057

IT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간소한 제조허가로 시장 출시 빨라졌어요!

IT융합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P업체는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기획했으나, 제조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출시를 고민했습니다. 조기 출시 가능 여부가 관건인 IT융합 의료기기 시장에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은 커다란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장 100일이 걸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절차(25일) 및 허가신청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절차(10~80일) 때문입니다. 혈당체크기에 블루투스같은 단순한 통신부품을 결합한 IT융합 의료기기도 제조공장별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해서 기업으로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장별로 받던 제조허가를 기업이 한번만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정) '13년 16억달러 ➡ '16년 50억 달러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5)

개선 전

IT기기와 융합된 단순한 측정용 의료기기도 제조업 허가 및 제품별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후

IT융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문정림 의원, '14.8월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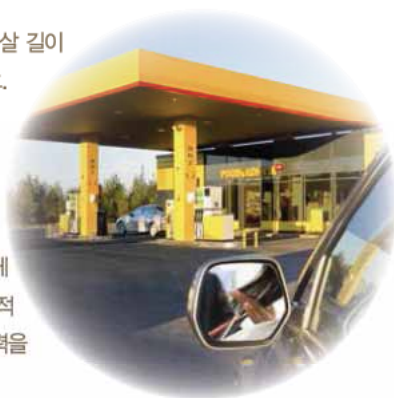
058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주유소에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놀랍지 않나요?

“우후죽순 생겨난 주유소들끼리 10원 단위 가격경쟁을 하려니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일본에선 주유소 미용실이 흔한 풍경이라는데, 한국에선 왜 안 되나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N씨는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실, 헬스장 등 더 많은 업종의 부대시설을 주유소 안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층수 면적 제한을 완화해, 과다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던 주유업계가 활력을 찾을 길이 생겼습니다.



• 주유소 경영 적자 해소 및 주유업계 경제 활성화 기여

약 1만3,000개의 주유취급소가 부대시설 활용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문의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02-2100-0855)

개선 전

주유소 내에는 물품 판매·대여업, 중개업 부대시설만 입점 가능
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
면적 500㎡까지 제한

개선 후

이·미용실,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 주유소 내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업종 확대
전 층에 부대시설 입점이 가능
면적 1,000㎡까지 확대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개정 (안전처, '14.4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처, '14.6월)

05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숙박업 등 추가

의료도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면,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A병원 의사의 말입니다. 중소병원인 A병원은 제2종합병원 및 의료관광호텔 건립을 준비하려 했지만,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제로 막혔습니다.

이제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업,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돼 보다 튼튼한 병원 운영을 하며 의료시설과 장비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환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의료기술은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의료 통역사, 의료 코디네이터, 국제간병인 등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 시설 투자, 일자리 창출 및 해외 환자 유치 효과

‘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달성 시 진료수익 1조2,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명 달성 전망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개선 전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이 가능(16개)

개선 후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28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숙박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등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14.9월)

060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국내 보험사도 참여 가능

보험사의 폭넓은 네트워크 활용해 의료관광객 늘었어요!

“해외 환자 끌어보려고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전담팀도 만들었는데, 비용과 인력 소모가 너무 크네요. 국내 보험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D병원 원장은 국내 보험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한편, S보험사는 오랜 사업 운영으로 쌓아온 전문성과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그러지 못 합니다.

D병원과 S보험사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외국 보험사처럼 국내 보험사도 국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외국인을 국내 병원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글로벌보험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국내 의료관광시장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 발굴
 - 외국인환자 증가로 보건산업, 숙박업, 관광산업 활성화
- 유치 채널의 다변화로 연간 최대 약 6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기대



개선 전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금지

개선 후

국내 · 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단, 영세한 기존 유치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통 및 숙박 알선은 제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복지부, '13.5월 제출)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9)

061

수출용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

수출용 제품은 외국 기준에 맞춰야죠!

“외국에서 판매할 제품인데 왜 국내 기준을 적용하나요?” 의약품 제조업체인 L사는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를 넘는 치아미백제를 개발해 수출 하려 했지만 규제로 막혔습니다.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국내 기준 때문입니다.

기존엔 수출용 제품에도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돼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를 넘으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 과산화수소 3% 초과 제품을 허용하는 경우 수입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서 치아미백제의 수출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 의약품 '치아미백제'의 수출용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총복 청주 L사, 수출용 치아미백제의 의약품 허가로 수출 증가 ('13년 대비 수출액 약 1.8배 증가, '14.10월 기준)



개선 전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치아미백제인 경우에도 국내 과산화수소 함유량 기준(과산화수소 3% 이하)을 적용

개선 후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대해 과산화수소를 3%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입국 사양에 따라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 가능
'의약품 범위 지정 규정' 개정 (식약처, '14.7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3702, 3703)

062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인증 가능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인증 기간이 빨라졌어요!

“저위험군 의료기기는 좀 더 빨리 인증해줬으면 좋겠어요.” K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등급 의료기기를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느라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K업체의 바람이 이뤄집니다. 공공기관 위탁인증제 시행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5일 내에 인증을 받아 빠른 시장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엔 제품의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았습니니다. 앞으로 개인용 온열기처럼 위해도가 낮은 1, 2등급 의료기기의 단순 신고·인증이 공공기관으로 위탁됩니다.



•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등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허가기간 단축(10 → 5일)

• 2등급 신청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원스를 처리



개선 전

제품의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모든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직접 수리

개선 후

위해도가 낮은 1, 2등급 의료기기는 공공기관에 위탁해 신고·인증,
위해도가 높은 3, 4등급 의료기기는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허가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김현숙 의원, '14.5월 발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9)

063

폐기물 재활용방식 기준 완화로 재활용시장 진입기간 단축

재활용 신기술 시장 진입 기간 4배 이상 빨라졌어요!

폐기물 재활용업자 P씨는 새로운 폐기물 재활용방식을 개발했지만
자신이 발명한 신기술이 법에서 정한 시장 진입 조건과 맞지 않다는
말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P씨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57개 기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소수의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신기술이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로 줄어들며,
재활용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 연 2,000억원의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기대

재활용시장 규모 약 45% 증가 예상
(‘13년 4조5,000억원 → ‘17년 6조5,000억원)



개선 전

법에서 규정한 용도·방법(현행 57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

개선 후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환경부, '14.9월 제출)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064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다시 태어난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폐기물이 왜 가축분 퇴비의 원료는 될 수 없나요? 유기물 함량이나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하다면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자인 N씨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로 막혔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로 N씨의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유기질 비료 중 농림·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는 단지 사용원료에 따라 종류가 구분돼 있었지만 이런 불합리한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시장 활성화도 기대하게 됐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활용,
연 약 460억원의 신규시장 창출 예상



개선 전

‘가축분 퇴비’와 ‘퇴비’는 유기물함량,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함에도 음식물쓰레기는 퇴비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 제약

개선 후

가축분 퇴비 및 퇴비의 원료규정을 통·폐합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농진청, '14.7월)

문의 : 농촌진흥청 농지재산업과 (063-238-0828)

065

굴 껍질,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

해안을 어지럽히던 그 많은 굴 껍질이 어디로 갔지?

“보기 흉하고 환경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굴 양식으로 생업을 잇는 M씨는 굴을 깔 때마다 쌓여가는 껍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식장들이 굴 패각을 해안이나 인근 연안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안어장의 오염 발생과 해안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방치돼 있던 굴 껍질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굴 껍질을 재활용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굴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더 이상 해안에 방치하지 않고 매립지의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아적 방치되고 있는 굴 껍질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연 40억원 절감 및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예상



개선 전

폐패각(버려진 굴 껍질)의 재활용이 불가해 해안에 야적 방치

개선 후

폐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 '14.7월)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066

폐기하던 계란껍질, 비료 원료로 재활용

계란껍질, 비료로 쓰니 쓰레기 줄어 좋고, 농민도 좋고!

“매일 버리는 계란껍질이 수두룩한데, 볼 때마다 참 아까워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O씨는 버려지는 계란껍질을 볼 때마다
재활용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동·식물 잔재물인
계란껍질은 비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계란껍질들은 필요 없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계란껍질로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규제 개선으로 인해 버려지던 계란껍질을 인근 농가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식물성 잔재물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비료원료 활용 확대



개선 전

폐기하던 난각(계란 등의 껍데기)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

개선 후

폐 난각 등 동·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해 비료로 제조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3.12월)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067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 확대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아요!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자금을 끌어오기 힘들었는데 IP담보대출로
특허를 인정받아 기쁩니다.” 기능성 섬유 원단 제조업체 V사 직원의
말입니다. 최근 V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허권만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IP) 금융 관련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고 규제가 완화돼 좋은 특허를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덜어졌습니다. 규제
개선 이후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이 확대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약 1,500억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 IP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확산으로
'14년 1,500억원 규모 투·융자 연계 및
약 7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29.3억원('14년 예산한액) × 25.7명
(예산 1억원에 25.7명 고용증가 효과)



개선 전

담보 설정된 IP(지식재산)에 대한 처분절차 부재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IP 평가에 관한 사항 부재
모태펀드 투자대상인 프로젝트가 영화 등으로 제한돼 IP에 투자 불가

개선 후

등록사무취급규정에 IP담보 처분을 위한 권리이전절차 규정 마련
운영지침에 지식재산평가 부문을 신설해 IP 평가 항목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 마련
모태펀드의 프로젝트 투자대상에 IP 포함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특허청, '14.9월), ‘등록사무취급규정’ 개정
(특허청, '14.12월)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69)

068

한글·영문, 출원서류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소중한 내 아이디어! 쉽고 빨라진 특허로 지켜요!

“특허 한 번 내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어서류를 번역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먼저 선점할까봐 걱정돼요. 문서 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게 특허 아닌가요?” 연구원 H씨는 자신의 영어논문 내용을 특허로 출원하고 싶지만 바쁜 연구 중 짬을 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 자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져 특허출원이 쉽고 빨라졌습니다. 또한 국문만을 고집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영어논문 출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 쉽고 빠른 특허출원으로 국내·외 특허 획득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이 연 140억원 증가 예상



개선 전

발명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는 국어로만 작성 가능

개선 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와 같이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 작성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가능해져 교수, 연구원들이 빠르게 특허출원 진행
‘특허법’ 개정 (특허청, '14.6월 공포, '15.1월 시행)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069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을 키웁니다!

“항공화물 환적은 신속함이 생명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호소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에 입항하는 환적화물의 97%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됩니다. 그런데,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등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적절한 시간 내 환적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커집니다. 국내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환적 하는 화물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적으면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 화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개선 전

김포-인천공항 환적화물 신고절차 복잡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가능

개선 후

김포-인천공항 환적화물 신고절차 통합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입항 시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
‘환적화물 특례고시’ 개정 (관세청, '14.8월)

• 절차간소화로 신규 물동량 3,000톤, 175억원의 부가가치 예상



문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대한민국, 특송물품 물류허브로 거듭나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물품들, 한국을 거치면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Y씨는 업무상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일이 많지만, 미·중간 국제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 부담이 큼니다. 중국의 세관 통관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까닭에 특송으로 주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항공 물류 규제가 풀리며 이제 다른 나라끼리의 전자상거래 물류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옮겨 실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배송되고 있던 화물을 한국으로 반입한 후 EMS로 바꿔 보내면 최대 60%까지 저렴해지니, 미·중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서 한국 물류 시장이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및

신 부가가치를 창출, 고용창출 효과 확대

환적 물류 신규 유치로 통한 연간 3,6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개선 전

공항으로 들어온 제3국행 특송화물을 국제우편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

개선 후

통관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3국 간 거래되는 특송화물을 공항으로 반입한 후 우리나라 국제우편(EMS)으로 바꿔 보낼 수 있게 될
EMS 환적물품 시범운영 (관세청, '14.5월)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건강 체크합니다!

“우리 병원이 개발한 앱이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대학병원 의사인 J교수는 당황했습니다. 몇 달전 J교수는 전립선암 발견 확률을 계산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입소문을 타며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기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식약처의 검토를 받으란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해당 앱은 의료기기로 판단 됐고, J교수는 뒤늦게 의료기기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인 의료용 앱을 의료기기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해 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료용 앱이 진단 오류를 내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판매기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면제되고,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이 생겨나며 많은 개발자들이 혼란 없이 안전한 의료용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보건 위해요소 사전차단 및

신시장 활성화

(전망)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2017년) : 230억 달러(28조원)



개선 전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수
안전 관리방안 부재

개선 후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 면제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적용('14. 12. 26. 현장적용)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민원주 의원, '14.6월 발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

3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실패의 부담을 덜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기업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072

창업기업의 공장증설 시 부담금 감면

창업 '7년차'지만, 처음처럼!

“공장 증설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요?” 경기도 A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K씨(창업 4년차)는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막대한 개발부담금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K씨의 이 같은 고충은 해소됐습니다.
공장을 보유 중인 창업기업도 공장 증설 추진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K씨의 경우처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부담금은 면제되고 인·허가 사항이
일괄 처리돼 신속한 공장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 창업 5~7년차 기업 증설에 따른

부담금 약 245억원 면제

1,303업체가 약 245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



개선 전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창업기업만이 부담금 면제 대상

개선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허용해 공장 증설 시 부담금 면제
'창업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중기청, '14.6월)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073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비싼 저작물, 더 이상 고민 NO!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벽지 제조업체 H사는 벽지 문양 디자인을 위해 매년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다보니 생산단가가 올라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전통문양을 발견해 디자인에 활용해보려 했지만 저작권법 등 관련규제로 활용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H사와 같은 고충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보고서나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소스 등의 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마크(OPEN)가 부착된 자료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lor.kr>)에서 사진, 음악, 영상, 어문 등 종류별로 약 280만 건의 저작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비용부담 절감 예상



개선 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음

개선 후

공공누리마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7월)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074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사만 짓는 농촌은 이젠 옛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채소 즙이나 장아찌를 만들어서 팔수는 없대요. 가공식품 시설 기준을 맞추라는데, 농가에서 일일이 설비를 어떻게 들어 놓습니까?” 경북 K군에 사는 P씨는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간 협업을 통해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돼 지자체에 보급됐습니다. 이제 소자본 농가들도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즙, 장아찌 등)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즙, 장아찌 등)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으로 향후 3년간 약 183억원의 농가 소득 창출 기대

개선 전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식품가공업 창업이 힘들

개선 후

농가의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허용, 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재질 설비 예외 인정,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인정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농식품부, '14.9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075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졌어요!

수중펌프를 생산하는 A기업은 창업한지 3년 된 회사입니다. A기업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 했으나, 납품실적이 2건 밖에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창업 3년차란 이유로 납품실적을 면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각종 계약체결 시 지원하는 창업초기기업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창업초기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 완화, 전용물 등재, 2단계 경쟁에서 가점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창업 초기 기업이 납품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 기대

약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문의 :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070-4056-7266)

076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로 경영연속성 보장

“군입대 잠깐만요! 사업 좀 키우고 갈게요!”

“집에 도착한 입대영장에 도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J씨의 하소연입니다. 3년 전 J씨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CEO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는 미룰 수 없는 군입대로 인해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8~24세 연령대의 초기 창업활동 지표가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시기에 군대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창업을 미루거나 공부에 뜻을 없지만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아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J씨와 같은 예비 벤처기업창업가들을 비롯해 20대 초기에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들도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되는 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기반 마련, 청년 창업 유도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5)

개선 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 불가

개선 후

청년 창업가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제도 신설
대상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 창업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병무청, '14.2월)

077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 가능

법인회사 설립, 집에서 클릭으로 끝!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수차례 오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창업을 준비하던 J씨는 법인 설립을 위해 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인터넷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할 때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부담 완화



개선 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

개선 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형의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설립이 가능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개편 (중기청, '14.12월)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62)

078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실패 걱정 말고 창업에 도전하세요!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쳐서 힘들었죠” 지난해 창업한 한 중소기업 CEO의 경험담입니다. 보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친인척 간에도 ‘보증은 절대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들이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통해 창업자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좌절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지 않던 상황도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

'14.9월말 기준 99건, 약 85억원 연대보증 면제
(대출금액 기준)



개선 전

관련 제도 부재

개선 후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대출금액 중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14.2월)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2)

079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 10%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 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

'14.2월 시행 후 9개월간 2675개 기업, 약 23억원의 보험료 할인 추산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41)

08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제도 개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료는 전액 돌려 드립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항의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K씨는 얼마 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업상 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음이 있어 지역신보에 보증대출을 신청했다가 지인이 돈을 빌려준 덕에 이를 취소했지만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제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보증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감액 실행된 경우, 또는 대출이 늦어진 경우 등과 같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엔 수납 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피보증인 금융비용 절감

'13년도 기준으로 추정, 1만7,760건
약 5,580만원 환급 예상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개선 전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보증서 반환일까지 보증료를 수납

개선 후

보증서 반환일에 상관없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환급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중기청, '14.7.)

081

중소법인에도 세금포인트 부여

성실납세 중소기업, ‘담보 없이’ 납기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원하는 시기에 맞춰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Y씨의 고충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번번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하는 Y씨는 1년에도 4번 이상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기에 드는 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Y씨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소법인들에게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 담보 없이 납기연장이 가능해져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유예 및 납기연장 가능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혜택
이용 실적
(‘11년) 5,260건, 2,114억원 → (‘12년) 4,642건,
2,817억원 → (‘13년) 3,274건, 2,644억원



개선 전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개인에게만 세금포인트 부여,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 제공

개선 후

모든 개인 납세자 및 중소기업에게도 세금포인트를 부여
‘세금포인트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달 (국세청, ‘14.2월)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2-397-1502)

082

정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대가 지급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정부가 나섭니다!

상용SW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사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년 재계약때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대가를 그대로 수용해 오다보니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R&D 등에 재투자할 여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중소 S(시스템 통합)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직원의 임금은
점점 높아가는데 정부 단가가 4년간 그대로여서 공공사업에
들어가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 주요 지식기반 사업인 SW산업 발전을 위해 SW분야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용SW 유지 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으로 대가지급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SW 예산편성 단가를 상향 조정해 SW기업의
공공사업 수주 환경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전문 SW기업 매출이 약 1,500억원 증가 예상



개선 전

SW개발사업 표준단가 : 497,427원
상용SW 유지관리요율 : 8%

개선 후

SW개발사업 표준단가 519,203원으로 상향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명문화 : 기준요율 12%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 (미래부, ‘14.5월)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42-2110-1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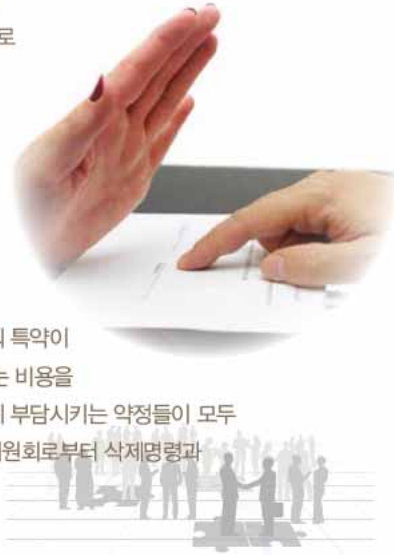
083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

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이젠 그만!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의 탄원입니다. 그는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한다든지 필요이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약조건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금지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간 단속의 사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들이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제됩니다.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개선 전

부당한 내용의 특약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음

개선 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위, '14.2월)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084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실패중소기업의 재기 기회 확대

실패 중소기업 재기, 보다 쉽고 빠르게!

“한 번 위기에 빠지니 참 헤어 나오기가 힘들군요.” G중소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G사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1년 가까이 되고, 2,000만원이 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G사는 보다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된 것입니다. 회생절차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1회 관재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실패중소기업이 빠르게 재기할 길을 열었습니다.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해 혁신 경제 구축에 기여



개선 전

회생절차 과정에 제1회 관재인집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함
회생채권자의 의견권 총액 2/3 이상 동의 필요

개선 후

제1회 관재인집회 개최 생략 가능,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회생채권자의 의견권 총액 2/3 이상 동의 또는 의견권 총액 과반수와 의견권자 과반수의 동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 중 (법무부 '14.6.제출)

문의 : 법무부 상사법과 (02-2110-3632)

085

일시적 휴·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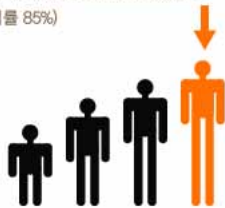
휴·폐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경기침체로 폐업했습니다. 2년 후 보증서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나 휴·폐업기업은 보증제한대상이었어서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다 하더라도 경영 의지가 있고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기업에 대해선 지역재단의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게 됐습니다.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을 허용해 휴·폐업기업도 사업 재개나 재창업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 휴·폐업기업 보증유예 적용으로
재창업 가능성 유도 및 일자리 창출
(2013년 국제통계연보) 2011년 신규창업자
99만 4,000명 중 84만5,000명 폐업
(폐업률 85%)



개선 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해당기업은 보증제한 대상으로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 불가

개선 후

(휴업기업) "사업재개 계획서"를 접수해 현실성 있고 연체 등 부실이 없을 경우, 기한연장 등 지원
(폐업기업) "재창업 계획서"를 접수해 예비창업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등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 개정 (중기청 '14.5월)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086

성실실패자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행

성실한 실패기업인에게 제도전의 기회를!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패로 제도전할 기회가 막히니 절망스럽습니다." 실패를 딛고 재창업을 계획하던 C씨는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대위변제를 일으킨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아 보증기관이 해당 채무액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도전 기회가 차단되곤 했습니다. 이에 보증금지 제한을 완화해 제도전 기회를 부여하게끔 규제를 바꿨습니다.



· 성실실패자의 제도전 환경조성으로
역동적인 창업 환경 조성
지역신보 대위변제기업 : 23만7,058개 업체
('14.10월 기준)



개선 전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 보증기관(지역신보, 신보, 기보)은 신규보증을 금지해 제도전 기회가 차단

개선 후

대위변제자 중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해 '성실실패자 제도전 특례보증'을 시행해 제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성실실패자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14.5월)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454)

087

중소기업,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창의적’ 기업에 ‘창조적’ 부담 경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되는데,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시책에 따라 600만원 유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감면되는 연차등록료만큼을 직원 복지에 쓸 계획입니다.

개인·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30% 일괄 감면됐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혜택도 부여했습니다.



- '12년 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4~6년분 등록료 30% 일괄감면과 20% 추가 감면할 경우, 약 68억원의 기업부담 경감 예상



문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개선 전

중소기업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시 최초 3년분에 한해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감면 없음

개선 후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4~6년분 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4~6년분 등록료 20% 추가 감면(2년 한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 '14.3월)

088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작지만 강한 기업! 사람이 경쟁력이니까요!

광주에서 소규모 산업디자인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뿐인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손은 늘 달리지만 창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뼈아픈 자금 사정 탓에 선뜻 인력 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C씨와 같은 창업 초기의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인력 채용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가뭄의 단비'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참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증대

'14.10 기준, 5인 미만 중소기업 380개소에서 420명 청년채용 진행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지원과 (044-202-7446)

개선 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개선 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14.4월)

숲 가꾸기 사업 어때요? 산림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숲 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법인을 신규로 등록 예정인 대표 A씨는 법인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최소 9명이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B씨의 경우, 일용직이면서도 본인이 속한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처리돼 다른 산림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최소 조건이 9명에서 7명으로 완화돼 산림사업법인의 창업 증가 및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부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에서 제외돼 직업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 산림사업법인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 및 연 27억원 직접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산림사업법인 중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9명(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개선 후

산림사업법인 중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7명(기술자 3, 기능인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림청, '14.6월)

문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187)

컨설팅? 비싸지 않아요!

“FTA 수출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고 돈도 부담돼서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영세 중소기업 대표 W씨의 말입니다.

이제 해외마케팅 능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FTA 수출컨설팅 사업이 개선된 것입니다. FTA 수출컨설팅 사업은 원산지 증명, 마케팅 전략수립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횟수를 늘리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 부담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한 결과 수혜 중소기업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전

‘13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지원횟수 : 1회/년
- 업체 부담금 :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기업들이 30% 부담

개선 후

‘14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개정
- 지원횟수 : 3회/년
- 업체 부담금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무료 / 10~50억원 이하 - 10%
50~500억원 이하 - 20% / 500억원 초과 - 30%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기청, '14.2월)

• 지원기업수가 649 → 1,270개로
약 2배 증가 예상



문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59)

09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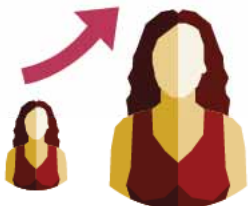
공공구매에도 여풍당당!

A여성기업은 이동형 서랍을 취급하는 업체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믿고 B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에 성공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중 B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14년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
(4조5,000억원 → 5조3,000억원),
여성 일자리 3,722명 창출 추정



개선 전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시 일정 비율(물품·용역 5%, 공사3%)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권고사항에 불과

개선 후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 '14.7월)

문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376)

092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갱신기간 확대

혁신이란 이런 것!

“인력이 없어 하루하루 정신없는 중소기업엔 부담스런 규제네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Z사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3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갱신평가 신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평가보다 30만원이 더 비싼 신규평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Z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증 '이노비즈'와 경영혁신 인증 '메인비즈' 신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만 해 기업 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 연 약 800개사, 약 2억원 비용 절감 및
행정부담 완화 기대



개선 전

유효기간 만료일 35일전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개선 후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중기청, '14.7월)

문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96)

09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대체수강 가능

직업훈련 시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일 잘하려고 받는 직업훈련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교대업무 때문에 못나가게 됐는데 결석이라니요? 학교도 공가 처리라는게 있는데 ……” 직업훈련 시간 때문에 일어났던 불편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정한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간주해 훈련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았습니. 하지만 규제 완화로 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애경사로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변경해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 이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돼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대제 근로자 등의 교육훈련 수료를
제고로 정부지원 불이익 해소



개선 전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되며 훈련참여 기회가 상실됨

개선 후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애경사 등으로 정해진 훈련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른 시간대에 대체수강 가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고용부, '14.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6)

094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 일원화

일용근로자 이중 신고, 이제 한번이면 OK!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절차가 참 번거롭습니.” 한 중소기업 대표의 고충입니.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했습니.

앞으로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신고가 면제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줄게 됐습니. 또한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용 모바일 '앱'이 개발·보급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층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약 1,800만건에 대한 중복신고
해소로 사업주의 신고 편의성 및 활력
제고



개선 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분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개선 후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국세청 신고를 면제, 이중신고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및 불편 해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국세청, '14.9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1-3709),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095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실수로 소멸된 특허권, 걱정 마세요!

“직원의 실수로 특허료를 미납했는데, 사업 준비단계란 이유로 특허권 회복이 안 된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누에 성분을 이용하는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허료 미납으로 신기술 특허권이 소멸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회복 신청을 했으나 ‘실시 중인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로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즉 사업을 준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했으며 특허료의 2배만 납부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허권 회복료 인화로
연간 약 4억5,000만원 부담 경감



개선 전

특허권자의 불가피한 사유, 실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이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제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하려면 특허료의 3배를 납부

개선 후

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
‘특허법’ 개정 (특허청, '14.12월)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096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정보를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근무 경력에 한국어까지, 이 분이 적임자네요!”

주식회사 S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생산공정이 다소 위험하고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정보는 국적, 연령, 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과 신체정보 정도에 불과해 업무에 적합한 인력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과거 근무 업종, 직무 내용, 근무 기간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식을 바꿔서 외국인근로자는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업에서는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업주가 적합한 인력 고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



개선 전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시 국적, 연령, 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 및 신체정보 제공

개선 후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시 기존 인적사항 및 신체정보 이외 과거 근무경력(업종, 근무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재를 의무화
사업주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097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20% 추가 고용 가능

인력난 해소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선박기자재, 산업설비부품 등 제조업체인 D사는 근로자 수가 60여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주조 전문 뿌리산업* 기업입니다. 생산공정이 위험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지만 정해진 '고용한도'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

외국인력 도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기존 고용한도보다 20%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이 이전보다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개선 전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0% 상향 업종 : 해당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명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높은 경우

개선 후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사업장을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외국인고용허용 인원 20% 상향 업종 : 해당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명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높은 경우 또는 뿌리산업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 (고용부, '14.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098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한 번이면 OK!

"우리 회사 직원 대부분은 외국인인데 고용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의 고충입니다.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점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결과를 타 부처로 전송해 신고처리 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 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해 신고자들의 혼동을 없앴습니다. 신고일원화로 민원 편의 증가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의 증대

'13년 기준 13만 5,000명의 고용주 혜택
신고 한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시
67억5,0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개선 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 근로개시신고 10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14일 이내

개선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 간소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시스템 개편 (고용부, 법무부, '14.10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 (044-202-7147),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매상이 쑥쑥 올라 신바람 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부담은 낮췄습니다.

099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 번에 우리 집까지!

“떡 배달은 안 되나요?” 전통시장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먼
곳에 사는 단골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만 즉석식품 배달이
허용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집에서도 시장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규제완화 덕분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리게 됐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음식을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 7만7,000여개('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의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개선 전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개선 후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14.10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100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파라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누가 닭을 포장한 채로 사갑니까? 한 달 벌이를 고스란히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H씨의 하소연입니다. 전통시장의 오랜 판매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생닭 포장판매 의무 규제 탓에, 많은 영세 상인들이 과태료 폭탄을 떠안곤 했습니다.

생닭 파파라치의 기승으로 속을 앓던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포장규제 완화 덕분에 해소됐습니다. 이제 위생요건을 갖춘 전통시장 판매업소라면, 생닭을 포장 없이도 진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연 7억5,000만원 포장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개선 후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가능
* 위생요건: 냉장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개폐형 냉장진열상자, 식육 전면의 표지판 등을 이용한 표시,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일을 사용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식약처, '14.10월)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3)

101

택배차량 증차로 합법적 영업 가능

택배기사, 단속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일해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까? 불법인 건 알지만 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택배기사 D씨는 불법 화물운송 단속 위험에도 자가용 화물차로 배달을 합니다. 한편, D씨와 계약한 C택배사는 배송 물량이 늘어나며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로 막혀 부족한 차량을 마땅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D씨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D씨와 C사의 고충이 한꺼번에 해소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택배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배달 차량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며 D씨와 같은 영세 택배기사가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1만2,000대의 신규공급을 통해 차량 부족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 1만2,000여명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상과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예방 효과



개선 전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 금지

개선 후

택배차량 부족분 1만2,000대 공급
'201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부, '14.8월)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도시가 살아난다! 관광객이 늘어난다!

“우리는 외국인 관광 민박집이라 외국인 손님만 받아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숙박업을 하는 H씨는 숙박 문의 전화에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쇠퇴하던 구도심이 예술촌으로 재탄생하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관광객에겐 숙박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씨가 사는 지역은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한 지역들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게 됐지만 정작 내국인이 숙박할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관광 여건
개선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과 발전에 기여



개선 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숙박을 제공하고, 내국인관광객에게는 숙박 제공 불가

개선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11월)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8)

뷔페영업자 부담 낮아지고, 제과점 매출 올라가고!

뷔페음식점 사장 M씨는 빵맛 좋기로 유명한 B제과점 빵을 구입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B제과점이 8km 거리에 위치한 까닭입니다. 거리제한 규제를 따르면 5km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을 구입해야 하지만 M사장은 도무지 5km안에서 맛있는 빵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에 제과기계와 인력을 더 들여놓기엔 자금 부담이 큼니다.

이제 M사장은 걱정 없이 B제과점에서 당일 조리한 빵을 구입합니다. 거리제한 규제가 풀린 덕택입니다. 뷔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km 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판매할 수 있게 했던 규제가 사라지며, 동네 빵집은 소득을 늘리고 뷔페는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뷔페영업자의 영업비용 절감(제과인력 및 제과기계류 구입비 등) 및 동네 제과점의 매출 증대



개선 전

뷔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 가능

개선 후

뷔페음식점의 제과점 빵류 구입 거리제한 규제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제 꿈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왜 헤어미용까지 배워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던 K씨는 메이크업샵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다 막막해했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만 배우고 싶은데도 커트, 퍼머 등 헤어미용기술까지 배워야 미용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성에 안 맞는 헤어미용까지 배우려니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국가기술자격취득부터가 큰 난관입니다.

메이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요건완화로 이 같은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업 기술을 위한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하려면 헤어미용기술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크업을 미용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따로 분리한 자격증이 신설돼서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으로도 국가기술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메이크업 분야의 취업 · 창업을 위한 자격취득 비용과 기간 단축

2008년 기준 미용사(일반) 자격취득자 약 42만명 중 13만명이 메이크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자격취득자의 31%가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을 필요로 함



개선 전

메이크업은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 포함
- 메이크업 기술을 위해선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 필요

개선 후

메이크업을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분리해
미용사(메이크업) 기능사 자격종목 신설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으로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메이크업
기술 가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2월 개정 예정 (교육부, '15.7.1 시행)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억울한 과징금, 반으로 줄었어요!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은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입니다.”
PC방을 운영하는 L씨에게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던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해져 있어 L씨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기 전 꼭 신분증 확인을 해왔으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고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한 까닭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덜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던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자에겐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위조 · 변조 · 도용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사실만 확실하다면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개선 전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인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개선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변조 · 도용한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듦
'청소년의 신분증 위 · 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감경자침' 제정 (여가부, '14.10월)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100-6293)

장사가 안돼서 영업장을 줄이는데 비용이 들다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속상한데, 가게를 작게 줄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해야 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Y씨는 속상했습니다. 불경기로 가게 규모를 줄이려 했지만 신고절차가 상당히 어렵단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식당 면적을 줄이려면 기존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변경된 설계도면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를 줄였다간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하기에 Y씨는 내부변경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을 감소 변경할 때 영업장 설계도면을 만들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규제가 개선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부변경을 하는 데엔 추가적인 소방시설 변경이 없기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비용부담 및 편익 도모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 비용
: 100만원~150만원/건



개선 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규개설은 물론 신고 영업장 변경 즉 확장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영업장 설계도면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

개선 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변경 없이 단순히 면적을 축소할 경우에는 영업장 설계도면 및 신고절차를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안전처, '14.9월 제출)

문의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2-2100-0848)

광고면적 늘어나니 전화기에 불납니다!

대전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P씨는 학원 외부 창문에 홍보물을 부착했던 이유로 지자체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선 창문광고가 허용되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쪽 건물에선 창문광고가 금지라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P씨가 단속을 받은 이유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구역에서의 창문 광고를 자체조례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숨어있던 불필요한 광고물규제가 발굴·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간판 광고와 차량 뒷면 광고도 허용돼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됐습니다.



• 자영업자 애로 해소, 광고물 산업의 활성화 기대



개선 전

법령과 상관없는 지자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금지
자동차·화물차의 옆면 1/2만 광고면적으로 활용 가능

개선 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가능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를 표시면적을 옆면 1/2과 뒷면 1/2까지 확대
시·도 광고물담당 회의 개최, 내용 전파 및 제발발지 안내 (행정부, '14.9월)

문의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3816)

전통시장에 주차가 쉬워졌어요!

“잠깐 물건만 전달하고 오면 되는데, 과태료 걱정에 매일 전전긍긍입니다.” 지역 전통시장에 배달할 일이 많은 택배기사 P씨에게 주차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도 거의 없는데 잠깐의 물건 배달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P씨는 걱정을 덜어도 좋습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형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평일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늘리고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특히나 혼잡한 명절 연휴 땐 전국 전통시장에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져 전통시장을 찾는 많은 이들의 편의가 늘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객 19.8%, 매출액 26.6% 증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선 전

전통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단속

개선 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허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택배운전자의 부담 완화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주정차 허용 및 계도위주 단속' 공문 시달 (경찰청, '14.1월)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8)

회사 눈치 안보고, 생계 걱정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인력소개소에서 사람을 불러 쓰기엔 비용 부담이 큼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음식점 사장 W씨는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6년부터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까닭에 신청을 못하는 예비군이 많았습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후반기에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의 생업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 경감
('12년 대비 51.8% 증가)



개선 전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만5,000명 운영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서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개선 후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3만5,000명으로 확대
신청자가 많은 지역과 시기의 휴일 훈련 인원 비율 확대
2013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3.1월)
2014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4.1월)

문의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110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줄어드니 장사할 맛 납니다!

“매출의 상당부분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로 빠져나가 등골이 찻 지경인데 말이죠. 연 매출액이 2억2,000만원이라서 우대수수료를 혜택을 못 받는 건 억울하네요.” 소상공인 K씨의 불만이 해소됐습니다.

이전 2억원~3억원 사이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다보니 K씨처럼 수수료가 우대가 필요함에도 문턱 효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개선되며 전체 가맹점 중 약 86% 점포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5,280여억원 부담 완화 예상



개선 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를 적용

개선 후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금융위, '14.12월 예정)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56-9856)

5

국민 불편 개선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에 불편은 덜고 생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111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앞으로 불합리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내는 길로~

“은행이 수익을 얻으려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데 드는 돈, 왜 고객이 다 부담하나요?” C씨는 O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저렴한 이자에 기뻐한 것도 잠시, 이자 외에 신용조사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추가로 내란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전에는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 외에 대출취급 수수료, 담보조사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들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용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런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연 1,0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추정)



대출취급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6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개선 후

6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삭제해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금융위, '14.4월)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56-9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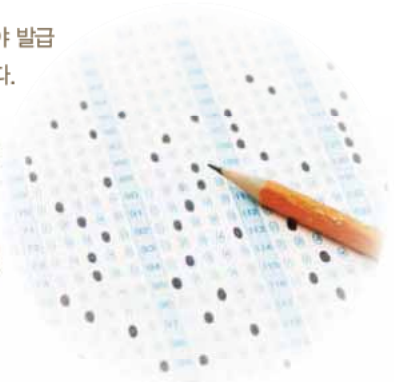
11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합격해서 좋고, 수수료 없어 더 좋고!

“접수확인서, 응시확인서는 무료인데 왜 합격확인서만 돈을 내야 발급 되나요?” 정보통신기사 시험에 합격한 C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전산화로 발급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기술자격 취득자들의 편리를 높였습니다.



• 연 18만여건의 발급 수수료
(약 1억8,000만원) 면제



개선 전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

개선 후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부, '14.6월)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113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

재혼가정 아픔 덜어내는 규제개선!

재혼을 한 C씨는 지난해 남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자녀가 남편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C씨는 자신의 자녀가 한 가정의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생각에 맘이 아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자녀는 실질적인 부양자녀임에도 이 조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부양자녀 요건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규제를 개선해서 재혼가정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재혼가정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확대로 가족 일체감 강화



개선 전

부양자녀의 판정기준은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 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자녀에서 제외

개선 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자녀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세청, '14.1월)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4)

114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한국으로 어학 연수 오세요!

미국 유명대학의 한국 분교인 N대학엔 학생들의 영어연수과정 입학 문의가 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N대학은 이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 까닭입니다.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은 이제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어 등 기타 외국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결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허용했습니다. 외국 유명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이 늘며, 한국에서 외국어 연수를 하려는 아시아권 유학생의 국내 유입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어 연수 희망자뿐만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희망자까지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외국인 어학연수생 증가 : (2013년) 21,381명
→ (2014년 11월) 24,695명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개선 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만 가능

개선 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한국어와 외국어가
결합된 어학연수도 가능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법무부, '14.4월)

115

해외 직점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요즘 대세 해외 직구! 반품도 일사천리!

“돌려받는 세금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더 비싸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대학생 Y씨는 겨울 코트를 더 싸게 사려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트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재질과 달라 반품하려 했지만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관세사에게 환급 절차를 의뢰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날리게 됐습니다.

Y씨 같은 해외 직구족들의 고충이 풀렸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관세 환급이 손쉬워지고 불필요한 통관수수료 부담도 해소됐습니다.



•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개선 전

단순 변심은 관세 환급 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개인은 관세사를 거쳐야 함

개선 후

해외 직구 시 단순 변심도 관세 환급 허용
개인의 경우에도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7월)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11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인감증명서 서류 하나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편리하다니!

‘신분증이야 사고 명의자에게 요청해 빌리거나 복사 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찮은 규제를 놔두는 거죠?’ 보험 설계사 K씨는 불만스럽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선 사고명의자를 대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 처리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아무 효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행정서류를 대신 처리하는데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K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K씨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발급 받을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도록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고 명의자가 서류까지 챙기긴 힘들습니다. 이젠 사고 당사자와 보험업 종사자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고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 연 2만7,000여건, 9억1,000여만원의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기대



개선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발급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개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발급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필요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제심사 중 (경찰청, '14.12월 예정)

문의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42)

117

특기 의경 온라인 지원 가능

특기 의경 신청, 인터넷으로 OK!

“가득이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경찰서까지 가려니 불편합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P군은 의무 경찰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사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던 P군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려다 황당해졌습니다. 일반 의무 경찰은 모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요리를 전공으로 한 특기 의경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군복무를 위해 의무경찰 지원 시 일반 의경은 의무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운전·조리·전산 등 특기 의경의 경우엔 안내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오류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특기 의경도 온라인으로 바로 원서접수를 하게 규제를 개선해서 그동안의 불편을 없앴습니다.



• 신청자 수가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13년 653명 → ‘14년 2,350명)



개선 전

특기 의경 원서접수 시 경찰서 방문 접수

개선 후

특기 의경 원서접수 시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및 내부 관리 서버·시스템 개편 (경찰청, ‘14.4월)

문의 : 경찰청 경비과 (02-3150-2862)

118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저소득 여성 지원 쏙쏙~ 일할 맛이 팍팍!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 했더니,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부녀자 소득공제를 취소하러더군요.” H씨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절감 세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규제개선 덕분에 부녀자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의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절감 세액을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약 7만5,000명,
800억원 수혜 추정



개선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개선 후

부녀자공제로 절감된 세금 액수를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청, ‘14.2월)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119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부품가격 미리 확인하니 바가지 쓸 걱정 없어요!

“자동차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카센터마다 다른 가격을 부르니 화가 나네요. 인터넷으로 부품 가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품 가격을 부풀려 파는 카센터가 불만이던 P씨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부품 가격자료 공개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



개선 전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5월)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120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헷갈리는 자동차 연비는 이제 그만!

“부처마다 자동차 연비 정보를 다르게 제공하니 도대체 무얼 믿어야 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D씨는 어느 부처의 말을 신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편, P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개발비 증가 및 양산시기 지연으로 고민 중입니다. 정부 부처별로 다른 연비규정과, 업계 중복규제 때문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며 부처별로 연비측정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고 중복규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비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판매된 자동차의 연비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아울러 연비 신고를 원스톱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동 신고포털을 운영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연비관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혼선도 줄이게 했습니다.



• 연비 표기에 대한 소비자, 제작사 혼란 해소



개선 전

부처별 연비 시험방법 별도 운영, 부처별 연비 사후 관리 별도 시행, 제작사가 부처별 별도 연비 신고

개선 후

연비 시험방법 통합,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온라인 원스톱 신고를 통한 부처간 정보 공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를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국토부 · 산업부 · 환경부, '14.11월)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3)

121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 일원화

경찰 민원, 접속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

A씨는 최근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경찰관서에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민원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경찰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했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경찰 민원의 온라인 처리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에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관련 민원 시스템을 통합해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각종 경찰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시스템이 구축돼서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 연간 약 900만건 민원 중 50% 온라인 처리시 1,467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추정)



문의 :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민원실 (02-3150-0434)

개선 전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
대부분의 민원은 방문 처리

개선 후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8개)의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을 모두 통합, 접수 및 처리 창구 일원화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8개 시스템에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 통합(경찰청, '14.12월 예정)

122

범죄경력회보서 영문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범죄경력회보서 손쉽게 발급해요!”

“돈 들어 번역하고 공증까지 받으려니, 참 취업하기 힘드네요.” 미국기업에 입사 지원한 A씨는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국문으로 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후 자비로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물론 번역, 공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엔 국문으로 된 회보서만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엔 언제 어디서나 국·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 93만건의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34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추정)



문의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3575)

개선 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개인이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개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 필요

개선 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 영문회보서 발급 가능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이민·취업 등 해외체류용 영문회보서('14.7월), 온라인 발급 (경찰청, '15.1월)

123

대입전형 예고기간 확대 및 발표된 시행계획 변경 제한

해마다 바뀌던 대입제도, 이젠 혼란스럽지 않아요!

“작년부터 꾸준히 논술 공부에 집중해왔는데 논술 비중이 줄어든단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고3 A양은 막막합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대입전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던, A양의 동생 역시 입학사정관제 폐지 소식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처럼 매년 새로 발표되는 대입제도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이제 맘 놓고 미리 전략을 짜며 대입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대입전형 발표일을 앞당기고, 한번 내용은 전형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 덕분입니다. 이로서 고1 8월엔 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고2 4월엔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확보
(‘14년도 지원인원 690,747명,
응시인원 606,813명)



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4)

개선 전

매 입학년도에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1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
공표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개선 후

매 입학년도에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
공표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허용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대학 구조개혁,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 등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14.4월)

12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복잡한 절차로 사람 잡는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OUT!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및 사전 본인확인 없는 원클릭 시스템 구축

“온갖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과정을 견디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한국 친구들이 신기해요” 프랑스의 한류 팬 엘리자 씨는 한국 아이들이 광고한 운동화를 주문하려다 포기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의 인증 절차를 뚫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을 괴롭혀온 온라인 스트레스의 주범, 공인인증서 규제가 개선됩니다. 우선, 30만 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던 의무규제가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결제 환경이 대대적으로 갖춰질 예정입니다.



• 내·외국인들의 전자상거래 결제불편
해소 및 거래절차 간소화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56-9856),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3)

개선 전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SMS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개선 후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구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14.5월)
‘기밀정보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 ‘14.8월)

125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면세점 알뜰쇼핑족에게 반가운 소식!

“얼마 전 카메라가 망가져 새로 사야하고,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400달러 한도 내에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에요. 카메라를 포기해야 할까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던 P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됐단 반가운 소식을 들은 맘을 놓았습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26년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해외여행객 1,5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기록하는 추세에 따라 규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상향된 것입니다. 내년부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 및 국민후생 증대



개선 전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로 제한

개선 후

2014년 9월5일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부터 면세한도 600달러 적용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14.9월)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126

온라인쇼핑몰, 주민등록번호 확인 없이 이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제공 없이 인터넷 쇼핑해요!

“온갖 쇼핑물에 가입하며 주민번호를 입력해왔는데, 혹시 유출되면 어찌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A씨는 요즘 불안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둔 온라인 쇼핑몰들이 A씨는 불만스럽습니다.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해외 쇼핑 사이트와는 달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본인확인을 요구해왔습니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됐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정보유출 걱정을 덜게 됐고 국내 쇼핑몰을 찾는 외국인들의 불편도 해소됐습니다.



• 인터넷쇼핑 이용자(약 3,000만명)가
주민등록번호 제공 없이 인터넷 쇼핑이
가능, 개인정보 수집·보존을 최소화해
유출 피해 최소화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게 돼 30배에 달하는
온라인 무역 역조 해소 기반 마련



개선 전

사업자는 소비자의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를 보존해야 함

개선 후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월 국회 제출 예정 (미래부, '15년 예정)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127

외국인의 한류 콘텐츠 구매를 가로막던 본인·연령 확인 해소

“해외에서도 쉽게 즐기는 한국 콘텐츠!”

쇼핑몰 운영자 Y씨는 최근 새로운 사업구상을 세웠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에게 특화된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음원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엔 I-PIN인증, SMS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이용자의 본인·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때문에 외국인들은 국내 사이트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이용자를 본인·연령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졌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 불편 해소
- 국내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



개선 전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연령을 확인해야 함

개선 후

외국 이용자에게는 본인·연령 확인 의무를 면제(접속IP 기준으로 외국 이용자 판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 '중립대책대행' 발표 예정 (미래부, '14.12월)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128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원클릭 간편결제' 가능

복잡한 온라인 결제 스트레스 OUT!

“해외의 페이팔,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이 훨씬 편해질 텐데요...” PG(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 C사는 외국에서 널리 쓰이는 원클릭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지만 규제에 막혀있습니다. PG업체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금지하는 규제 탓에 매번 결제 때마다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카드결제시 I-PIN, SMS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현실도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카드결제가 간편해집니다. PG업체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결제할 때마다 필요했던 본인 인증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 전

PG사(전자결제지급대행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이 금지되어, 결제시마다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함
결제할 때 마다 본인인증 요구로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불가

개선 후

PG사에서 신용카드승인정보를 저장 가능하도록 가맹점약관 개정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ID, PW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예정 (미래부, '14.12월)

-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로 소비자 이용 편의성 증대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131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인터넷 주문으로 간편하게 건강 체크하세요!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시험지는 꼭 약국에서 사야하나요?” 콜레스테롤 수치 고위험 진단을 받은 Y씨는 꾸준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시험지는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참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Y씨는 이제 번거롭게 약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시험지를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는 의약품으로 이를 이용한 측정분석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두 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시험지도 측정분석기처럼 의료기기로 바뀌며,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한 원스톱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신진단기기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한 128만여명의 고지혈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편의성 제고



개선 전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이를 이용한 분석기를 각각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관리
임신진단기기를 의약품으로 관리

개선 후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및 임신진단기기를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해 사용자 구입 편의성 제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11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132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통사 번호이동 가능

LTE폰도 내 유심 꽂으면 사용 가능!

H씨는 얼마 전부터 아들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망설이던 찰나,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자신의 최신 휴대폰을 준 것입니다.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던 H씨는 쓰던 유심을 그대로 아들의 LTE폰에 삽입해 저렴한 LTE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H씨가 아들의 폰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규제가 개선된 덕분입니다. 전에는 3G 스마트폰의 유심은 자유롭게 기기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LTE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끼우면 LTE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며 A통신사에서 구입한 LTE 단말기('14.7.1.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 B통신사의 유심을 끼워도 모든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LTE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 · 이통사 선택권 강화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



개선 전

3G스마트폰은 유심을 마음대로 바꿔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LTE 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끼우면 데이터를 제외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음

개선 후

유심 이동성을 3G뿐만 아니라 LTE서비스 까지 확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 (미래부, '14.7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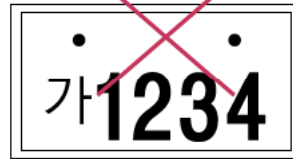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13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지역번호판, 이사 후에도 쭉~ 사용해요!

“바쁜 직장생활 중 따로 시간을 내 교체비용까지 부담하며 꼭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까?” 서울에 살던 K씨는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았던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의 녹색 지역번호판을 흰색의 전국번호판으로 바꿔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진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 소유자는 주소 변경 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번호판을 전국번호판(○○가○○○○, 흰색)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장생활 등으로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K씨처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를 폐지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 절감,
과태료 최대 246억원 부과 방지



개선 전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 시 번호판 교체 필요
미 교체 시 과태료 부과

개선 후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시도로 이사해도 기존 번호판 계속사용 가능
과태료 부과 폐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14.10월)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134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 폐지

요일제 스티커 없다고 출입금지 당할 걱정 없어요!

“바쁜 외중에 잠시 짬을 내 구청에 들른 건데, 요일제 스티커가 없단 이유로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을 헤맸네요. 요일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급한 민원이 있는 시민을 무조건 막아서는 건 너무하군요.” 직장인 H씨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출장차 여권을 갱신하러 구청에 갔다가 입구에서 출입 거부당 당한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과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민간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에 대해선 요일제 적용을 면제해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개선 전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적용
- 예외 :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개선 후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해선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산업부, '14.6월)

문의 :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96)

135

청소년 인터넷게임 설타운제에 '부모선택제' 도입

우리 아이 게임 시간, 대화로 풀어요!

"주말 밤엔 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좋다고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는데, 청소년이라 그럴 수 없는 게 답답해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중학교 2학년 H군의 말입니다. 이제 '부모선택제' 덕분에 H군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H군이 주말 새벽엔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도록 H군의 부모님이 게임회사에 요청한 것입니다. H군은 방학을 맞으면 게임시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부모님과 다시 한 번 대화 후 결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16세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선택제'가 도입된 후 가정 내에서 게임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의 교육권 · 양육권 강화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 양자의 조화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3)

개선 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는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

개선 후

부모(친권자) 요청 시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가능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제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 명령 단계를 거친 후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처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여가부, '14.11월 제출)

136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숫자로 대체

불필요한 지역 표시는 이제 그만!

"어머, 과장님 경상도 분이셨네요?" 업무 차 거래처 직원을 동승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Y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검문이 있어 잠시 운전면허증을 꺼냈다 넣었을 뿐인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출신지를 짐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운전면허증 첫 줄에 큰 글씨로 지역 표기가 돼 있어서 언뜻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역만 경북일 뿐, Y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는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 상단엔 '서울 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면허를 발급받은 지역명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유발되거나 면허 취득지역이 출신지와 달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기를 폐지했고, 새롭게 바뀌는 면허증엔 '서울'과 같은 지역명이 숫자로 표기됩니다.



• 지역감정 유발방지로 인한 사회 대통합 기여 등 국민편의 증진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650)

개선 전

운전면허증에 면허취득 지역 표기

개선 후

지역을 숫자로 대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 '14.7월)

137

청원경찰 임용연령 폐지로 50세 이상 취업기회 확대

인생은 50부터, 이제 나도 청원경찰!

50대 퇴직자 N씨는 아직 활기가 넘칩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기에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제 2막을 열고 싶습니다. 주유시설의 청사방호 등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업무에 관심이 생겼지만, 50대란 이유로 도전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제 N씨에게도 청원경찰이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연령 규제가 사라진 덕입니다. 청원경찰은 기관이나 사업장에 배치돼 감시단속 및 경비업무를 합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연령이 5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50세 이상 시민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규제 폐지를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규제폐지 후 임용된 청원경찰 총 47명

현재 청원경찰 총 인원이 1만3,308명으로 현재의 50세 이상 임용 추세가 지속·확대될 경우(전체 임용자 중 약 8.6%) 97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문의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개선 전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연령을 50세미만으로 제한

개선 후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폐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4.3월)

138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처음 시작하는 농사, 온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선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기가 겁납니다. 근데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나 높으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네요.” 얼마 전 귀농을 결심한 Y씨는 소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빌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온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임차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규모도 2,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좌절했습니다.

이런 규제 탓에 그동안 귀농인들은 첨단 온실 신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 특성상 소규모 영농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인에 한해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 설치 규모를 661㎡ 이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자금이 부족한 귀농인도 보다 쉽게 영농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선 전

자동화비닐온실 설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사업 규모는 2,000㎡이상~20,000㎡으로 제한

개선 후

귀농인이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차 잔여기간은 5년 이상, 지원범위는 사업자별 661㎡이상부터 지원 가능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지침개정 (농식품부, '14.4월)

• 소규모 영농을 선호하는 귀농인의 농업기반 마련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 효과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9)

산림 훼손 막고, 귀농인 거주지도 생기고!

“농림지역을 피해 전원마을을 지으려면 산지를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기반조성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 정착금이 커지니 귀농예정자를 유치하기도 참 힘들습니다.” B전원마을 시행사 직원의 말입니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주택단지인 B마을은 당초 도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마을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사업부지에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B마을은 산지 훼손 없이 도로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를 활용하면 농림지역 비율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원마을 조성 시 농림지역 비율 제한 탓에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지만, 이전 난개발 없이 귀농인의 정착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농촌지역 난개발을 방지, 기반조성 비용을 절감해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



개선 전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

개선 후

자투리 농지*(2만㎡)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이 50%를 초과해도 전원마을 조성 가능

-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철도 등의 설치, 택지조성, 산업단지 지정 등 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이하의 농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농식품부, '14.9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직구 해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S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맘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입 버튼을 눌러 미화 152불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란 이유로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물품을 받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술을 실수로 같이 구매한 탓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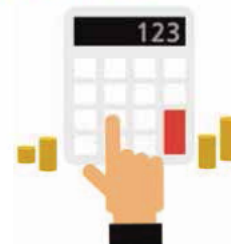
Online shopping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로 이 같은 국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선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속한 면세통관과 통관 수수료 절감으로 편리한 해외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 관세, 통관 수수료 등 연 572억원의 가계 지출 절감(추정)



개선 전

목록통관 대상: 의류·신발 등 6개 품목

개선 후

목록통관 대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
단, 국민건강과 관련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6월)

문의: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141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학자금 중복 대출? 신입생이라면 OK!

지난해 대학입시를 치른 H군은 목표로 하던 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소식을 들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대학의 대출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H군은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이런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동일 학기 중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개선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1차 합격 대학의 대출금을 반환이 늦어지더라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을 먼저 진행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3,000여명의 학교이동 대출자의
등록금 추가 마련 부담 해소



개선 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 대출 불가
학자금 중복 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 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교육부, '14.1월)

문의 :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271)

142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초·중등학생 어학캠프 가능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어학캠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애도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싶는데 비싼 금액에 엄두를 못 내겠어요." L씨와 같은 입장인 학부모들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학교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대학이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어학실, 기숙사 등의 시설과 우수한 강사들을 활용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려 했으나 규제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 이후론 대학 내 어학캠프가 활성화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감면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도 비싼 사교육비 부담 없이 국내에서 양질의 어학연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 국내 학생들의 유학비 지출 축소,
외화 유출 최소화.

2014년 여름방학 중 총 52개 학교에서 어학캠프 운영, 1만여명 참여, 이중 2,700여명은 수강료 감면 혜택



개선 전

초·중등학생 대상, 대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개선 후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어학캠프 운영을 위한 MOU 체결기준' 안내 (교육부, '14.5월)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143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 납부 가능

각종 부담금, 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고지서를 죄다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 납부를 해야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C씨는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느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C씨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손쉽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이 다양화되며 국민의 편의도 늘리고 징수율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도 국제 가산금 수준을 넘지 않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 편의 증진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



개선 전

부담금 부과, 감면, 환급절차만 규정, 납부수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일부 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요율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높음

개선 후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제 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재부, '14.2월 제출)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22)

144

산업체 근무경력,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졸업학점 걱정 없이 주경야독!

“낮에는 업무부담, 밤에는 학습 부담으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심각하게 휴학을 고민 중입니다.” 만학도 H씨는 못 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사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느라 졸업학점 취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H씨의 고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산업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무경력이 아닌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만이 사내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있는 근무 경력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사내대학 학생의 학업부담 완화 및 사내대학 활성화

'14년도 현재, 8개 사내대학에 608명 학생 재학 중



개선 전

사내대학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졸업학점으로 불인정

개선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학점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14.12월)

문의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887)

6

안전한 사회 구축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45

연안 여객선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블랙박스로 선박 안전 지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국민이 선박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제항해 여객선은 블랙박스라고 알려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국내(연안) 항해 여객선의 블랙박스 설치의 의무화 돼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에 따른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해안전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이제 연안 여객선도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 속력, 운항경로, 통신내용 등을 기록하므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의 운항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니, 선박 종사자들은 안전관리에 더욱 안전을 기할 것입니다.



• 해양사고 원인 규명 및 선원의 성실 근무와 비상시 적정 대처를 유도

연안 여객선 총 173척('13.12월 기준) 중 21척이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선박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선박용 블랙박스를 설치



개선 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 의무

개선 후

연안여객선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현존선) 500톤 이상 연안여객선
(신조선 또는 중고수입선)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
'선박설비기준' 개정 (해수부, '14.9월)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9)

14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은 기본, 늘어나는 일자리는 덤으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법 개정에 맞춰 빠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투자 등 사전준비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중소기업 대표 M씨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제 M씨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화학안전과 관련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투자비용을 지원받고, 방문 컨설팅을 받으며 더욱 안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설비 투자 활성화로
비용편의 발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17년까지 안전설비 투자펀드 5조원 지원 예정

개선 전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개선 후

정부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 사업,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중소기업체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부, '15.1월 시행)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과 (02-6050-1303)

14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려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

원전의 안전 책임감이 커졌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O씨의 마음 한 구석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혹여 한국에서도 원전 피해가 발생하면 과연 빠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O씨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 당 10배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개 원전 부지가 각각 5,000억 원씩 모두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 손해보험 의무 가입 총액이 높아지면서 원전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더욱 넉넉히 확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 확보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가능

개선 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억원으로 규정
* 배상조치액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공탁금액

개선 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올려서 원전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원안위, '14.12월)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7)

148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잃어버린 휴대폰, 나쁜 일에 쓰일까봐 걱정하세요?

“좀처럼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네요.” 며칠 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J씨는 괜스레 불안합니다. 분실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둔갑되는 일이 많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J씨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정보를 공유하게끔 규제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이 차단돼서 이용자 피해가 줄고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개선 전

분실·도난 휴대폰 정보가 이동통신사 간에 공유되지 않아서 휴대전화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컸음

개선 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을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래부, '14.2월)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9)

14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지하철, 안심하고 타세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가해자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지하철 안에 CCTV라도 있었다면 분명한 증거 앞에서 발뺌을 못 했을 텐데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하는 직장인 N씨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봐 늘 불안합니다.

도시철도차량이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기 때문입니다. CCTV 덕분에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 21개 노선, 하루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개선 전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차량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개선 후

신규 구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
'도시철도법' 개정 (국토부, '14.1월)

문의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15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큰 문은 편하게 자동으로, 작은 문은 안전하게 수동으로!

A조선표의 창고엔 자동으로 작동하는 초대형 문이 있습니다. 초대형 문에는 손으로 열고 닫으며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따로 달려있습니다.

사업장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땐 수동으로도 그 문을 여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행장, 조선표와 같은 중공업 현장에 설치된 초대형 문은 현실적으로 손으로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조선표처럼 별도의 수동문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동안의 법은 이런 경우까지 불법으로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 맞는 규제개선이 이뤄진 덕분에 작업장 환경이 보다 안전해졌습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동설비 구축
비용 절감



개선 전

동력으로 작동되는 대형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개선 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소형문을 설치해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규제개혁은 계속 됩니다!
추가 제언이나 문의사항은 연락주십시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66
규제개혁신문고 www.better.go.kr

희망을 넘어 행복으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발행일 2014년 12월 23일
펴낸곳 국무조정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승로 261 (어진동) 세종청사 338호
전 화 044-200-2407
팩 스 044-200-2448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국무조정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획·디자인 커런트코리아 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